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9
4	讲义	63
5	퀴즈	87
6	토론	91
7	자료	93



## 학습안내

### 01

#### 과목소개

<한국 수산업 발전사>는 한국의 수산업과 발달과정을 어업법 형성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교과목이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한국에서 공유재인 수산자원의 소유권 형성과 그 실태, 그리고 근대적 형태로 법제화 되는 일련의 과정과 그 시사점을 학습할 수 있다.

### 02

#### 학습목표

- (1) 조선시대부터 식민지기까지 어업권이 현대의 수산업법의 형태로 이행되는 역사적 과정을 학습한다.
- (2) 근대적 어업권 제도 도입 이후 전통적 어업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식민지기수산업의 실태를 어업권 통계를 통해 학습한다.
- (3) 수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한국 수산업의 발전 단계를 학습한다.

### 03

#### 기대효과

이 강의를 통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유재인 전통적 어업권이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관리되었으며, 한말과 식민지기를 거쳐 구래의 어업권이 현대의 수산업법의 형태로의 이행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특히 사료를 통해 근대적 어업권 제도가 현실에 적용되면서, 이에 상응하여 조선의 전통적 어업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어업권의 종류, 취득, 처분 등 어업권 통계로부터 당시 식민지기의 어업의 현황에 대해 실태적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경제에서 1차 산업인 수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다.





## 04

### 주차별 구성

1주차	조선 후기 수산업과 조세제도
2주차	사료로부터 본 조선 후기 수산업의 실태
3주차	한말(韓末)의 수산업과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
4주차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과 전통적 질서의 변화
5주차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과 어업권의 소유변동
6주차	수산업의 발전과 한국경제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1 주차

## 조선 후기 수산업과 조세제도

### 1-1

### 강의소개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수산업 발전사> 강좌를 맡은 송경은입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조선 후기 수산업과 조세제도에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수산업의 발전사에 대한 강의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어업법 형성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한국 수산업의 발전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한국은 남북으로 길쭉하며, 동쪽은 동해, 서쪽은 서해, 남쪽은 동중국해와 대한해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러시아 연방과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제주도와 동쪽으로는 울릉도가 있으며, 약 3,962개의 섬을 포함합니다. 한국의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섞이는 조경수역으로서 용존 산소량과 영양염류가 많아 먹이가 풍부하여 소위 황금어장을 형성합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자연환경 하에서 1차 산업인 수산업은 조선 시대 이전부터 중요한 산업 분야 중 하나였으며, 특히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한국 전쟁 전후 어업 행위를 통해 채포한 어획물은 주요한 외화 획득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수산업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써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었습니다.

모든 국가에는 영토가 있으며, 바다에는 영해가 있습니다. 본 강의는 영해, 즉 연안의 어장을 관리하는 국가의 기본 체계인 '어업법'을 주제로, 조선 후기부터 현대 수산업법의 원형이 갖추어진 식민지기까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수산업의 채포(採捕) 대상인 '수산자원'을 경제학적인 관점, 즉 공유자원의로서의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논의에 주요 주제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강의의 주요 키워드인 수산자원의 기초 개념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물속에서 서식하는 수계생물(水界生物) 가운데 인간에게 산업적 이용 가치가 있어 채포(採捕) 또는 양식의 대상이 되는 생물을 통틀어 수산생물(水産生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水産資源)은 이러한 수산생물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현재 인간이 이용하고 있는 수산생물을 말합니다.

수산자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산자원은 자율갱신자원이라는 고유의 생물학적 특성을 보유한 자연자원(自然資源)이자 경제재(經濟財)로서 공유자원(共有資源)입니다. 자연자원은 크게 갱신이 가능하지 않은 고갈성자원, 비갱신자원(exhaustible, nonrenewable resources)과 갱신이 가능한 비고갈성자원 혹은 갱신자원(inexhaustible, renewable resources)으로 나뉩니다.

고갈성자원인 비갱신자원은 부존량이 한정되어 있어 사용에 따라 소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금, 은, 석탄, 석유 등 광물자원이 대표적인 고갈성자원입니다. 이에 반해 비고갈성자원은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끊임없이 보충되고 갱신되는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햇빛, 공기, 어류, 산림은 자연의 순환 기능에 의해 스스로 끊임없이 보충되고 갱신되는 대표적인 비고갈성, 즉 갱신자원입니다.

이러한 갱신자원은 다시 자율갱신자원(self-regulating resources)과 비자율갱신자원(nonself-regulating resources)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자율과 비자율의 구분 기준은 인간의 사용률에 의해 그 존재량이 변하는가, 그리고 존재량의 변화가 다시 갱신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입니다.

비자율갱신자원은 인간의 사용과는 무관하게 항상 보충됩니다. 즉 갱신률이 일정하다는 특징을 지니며, 대표적으로 햇빛, 공기, 강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자율갱신자원은 재화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는 않으며,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의 공공재적 특징을 지닙니다. 비배재성은 어떤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이며,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더라도 경쟁이 붙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자율갱신자원은 끊임없이 보충되는 갱신자원이나 인간의 사용에 따라 미래 자원량이 변동된다는 점에서 비자율갱신자원과 구분됩니다. 하딘(Hardin)이 지정한 '공유지의 비극'은 자율갱신자원을 갱신률 이상으로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결국 자원이 고갈되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설명한 대표적 용어입니다. 자율갱신자원에는 산림, 목초, 어류, 수질, 야수 등이 포함되며, 재화로서 공유 자원적 특징을 보유합니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공유자원(共有資源)입니다. 공유자원은 비배제성(非排除性)과 경합성(競合性)을 특징으로 합니다. 비배제성은 다른 사람들이 재화를 향유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 지출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재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정인이 소유하기보다는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는 공공재의 대표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가 공공재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의 소비가 전체 구성원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를 경합성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사유재(私有財)가 보유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사유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춘 재화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배제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특성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자원에 대한 환경 또는 자원경제학 논의에서 '고갈(枯渴)'은 시발점이자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공유자원의 소유권체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시초는 공유자원이 경제학에서 중요한 재화로서 인식되는 것과 같은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 사회에서 자원의 고갈, 오염 등 환경의 이용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인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경제학계에서도 공유자원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원의 관리에 대한 주류적 관점은 재화의 이용에 있어 이용자 간의 경합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갈등이 유발될 때 합리적 제도 장치 또는 조치가 부재할 경우, 결국 하딘이 말한 '공유지의 비극'으로 귀결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딘(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유자원의 사유화 또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제시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근거한 분석 틀과 관리제도는 지금까지도 많은 국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유자원 관련 연구의 발전양상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자원 관련 연구는 초기 신고전파를 바탕으로 하는 주류 경제학에서 지속되었고,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재산권적 접근으로서 철저하게 시장에 맡기자는 시장지상주의와 나머지 하나는 비용-편익 분석 등 물질 균형에 의거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이 그것입니다. 특히 후자는 정부 간섭하에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유자원의 연구 발전 경로는 신고전파의 바탕에 생물학적 관점이 더해져 단순 비용과 편익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환경 사이의 상호의존관계를 중시하는 생경제학(Bioeconomics)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생경제학이 주류 경제학과의 구분되는 주된 차이점은 생태계를 독립적인 요소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경제체제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공동으로 진화한다고 믿는 점입니다.

생경제학은 어류, 지하수 등 자율갱신자원의 특징을 가지는 자원의 미래 자원량은 현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용량과의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생경제학은 인간의 사용량에 따라 미래 자원량이 변하는 자율갱신자원이라는 것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그 특성에 기반하여 자원량을 예측하고 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컨대 '공유지의 비극'으로부터 시작되어 '생경제학'으로 이어져 온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경제학적 논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정 자원소비량의 측정 방식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점 하 공유자원 관리정책 수립 및 이행 주체는 여전히 정부이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관리 효율화에 여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이에 최근 연구의 방향은 공유자원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 중심의 자치적 관리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경제학적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지의 비극'을 지양할 수 있는 공유자원의 이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스트롬은 동 주제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유자원의 지배체제와 관련하여 시장과 국가로 양분된 고전경제학적 시각에 벗어나, 지역공동체가 구성원의 합의하에 공유자원을 협력적으로 관리하는 다수의 사례를 발굴하고 그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가 관장하는 공적(公的)인 제도와 공동체가 관장하는 사적(私的)인 제도가 상호의존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스트롬의 주장에는 전통적으로 공동체가 계승해온 자연자원 관리방식의 다양한 사례연구가 밑바탕에 있습니다. 자연의 이용과 관련하여 경험적으로 터득된 지식을 활용하는 공동체 소유방식은 생태계적 관점에서 자연자원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근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 주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핵심은, 공유자원의 내재적 특징인 '경합적 이용', '자원고갈'문제를 인류가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오스트롬은 다양한 공유자원의 이용사례 분석을 통해 장기 지속하는 자원관리방식의 일반화된 법칙을 여덟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첫째, 법적 사용자 및 자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설정 존재,
- 둘째, 자원의 사용과 노력-비용과 관련된 규칙이 지역사회에 적합한 상태여야 하며,
- 셋째, 규칙의 생성과 수정에 있어 규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
- 넷째, 사용자의 이용 및 자원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
- 다섯째, 반복적 규칙의 위반에 대해 처벌의 수위가 누진적일 것,
- 여섯째, 분쟁 해결 매커니즘은 신속하고 낮은 비용을 수반하는 방식일 것,
- 일곱째, 지역 사용자가 만든 자율 규율은 법적으로 정부로부터 공인되어 침해당하지 않을 것,
- 여덟째, 공유자원의 관리 체계가 중층적이고 정합적인 사업 단위로 조직될 것이 그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규칙, 즉 법적 사용자 및 자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설정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으로 공유재산의 소유권 체제가 어떻게 귀결되는지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적 사용자 및 자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설정이 없을 경우, 공유자원은 자유접근체제로서 결국 과대 소비 가능성, 즉 고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최근 연구성과로부터 고갈 없이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유자원 소유체계의 역사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식하에 본 강의의 주제는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기까지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에 대한 소유권 체제가 형성되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공유자원 관련 연구의 발전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본 강의의 주제로 집중하겠습니다.

조선에서 바다에 대한 소유체계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제도는 어떠한 형태로 발달하고 있었으며, 그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이에 대한 답이 첫 번째 강의 주제입니다. 조선 시대는 한말까지 공유자원은 왕의 소유라는 이념을 유지하되, 실제 바다의 점유와 이용에 대해 국가가 공인한 방식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장적(帳籍)하여 조세를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조세 부과기준은 어선(漁船) 등 어업 생산수단과 어전(漁箭), 괘전(藪田) 등 생산장소였습니다. 이것이 전국적 범위에서 추진된 것은 1750년 균역법 하의 해세제도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조선시대 해세제도를 살펴보고, 조선의 어업 소유체제 성립에 있어서 동 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 모든 바다와 강, 즉 수계(水界)는 공유자원이지만, 공유자원은 모든 재화와 자원이 그러하듯이 그 산출과 가치에 의해 경제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모든 수계, 바다가 어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용한 수계동식물이 서식하거나 혹은 회유해 오는 장소여야 하며, 유용 동식물의 채포(採捕) 및 양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장소여야 하고, 더불어 그곳에서 수산동식물의 채포 및 양식이 경제적으로도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수계, 즉 바다에서 공유자원의 경합적 이용의 발생 여부는 해당 수계가 자원량이 풍부하고 또 기술적으로 어획이 가능한 어장이어야 한다는, 즉 어장의 경제적 가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구래(舊來)의 수계, 즉 바다에 대한 민간에서의 소유체제는 어장의 경제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에 수산자원의 소유권 체제가 우선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자원적 형태와 그 이용방식을 실제 사례와 사료를 통해 밝히고, 근대적 어업권 제도로 이행되는 역사적 과정, 즉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강의의 두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동 주제는 2주차와 3주차에서 다루어집니다.

한국에서 어업과 관련된 근대적 소유권 체제는 1908년「어업법(漁業法)」과 1911년「어업령(漁業令)」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현대에서도 국가가 어업에 대한 배타적 권리 즉, 어업권을 부여해 주는 체계로 면허(免許), 허가(許可), 신고(申告)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는「삼림령(森林令)」,「광업령(鑛業令)」등 식민지기에 도입된 자연자원에 대한 근대적 소유권 체제의 일환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어업법」과 「어업령」을 통해 면허, 허가, 신고로 분류되는 근대적 소유권 제도의 도입은 법제도적으로 어업권 취득을 통해서만 어장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부이지만 사용·수익·처분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만 국한하는 법적 제약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방식의 소유 주체를 창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도적 원류는 일본 지선(地先)어장의 전용어업관리제도(專用漁業管理制度)로, 이것을 축소 변형하여 식민지 조선에 적용하게 됩니다. 앞서 오스트롬의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어업에 있어 공동체의 소유체제는 현대에도 공유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인데, 이것이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내용은 4주차 강의에서 진행되며, 한국에서 근대적 면허어업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공동체적 소유가 창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논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강의 주제는 20세기 초 한국에서「어업법」과「어업령」의 전반적인 이행현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1911년「어업령」에 의해 근대적 어업권 제도가 성립되었다는 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근대적 어업권 제도의 도입 초기 어업권의 발급 실태와 양상은 어떠하였는가? 소유 주체는 개인이였는가, 어업공동체였는가? 아니면 특정 소수가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였는가? 기존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전통적으로 어업공동체가 발달하고 있었는가? 이들은 식민지기 근대적 어업권이라는 제도 변화를 어떻게 흡수하고 있었는가? 그들이 소유한 어업권의 종류는 어떠하였는가? 과연 어업공동체는 실재하였는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 5주차 강의에서, 식민지기에 형성된 어업권 제도를 주제로『관보(官報)』에 기재된 어업권 기사를 바탕으로 어업권 통계를 산출하여, 어업 종류별, 어업권 소유 주체별로 구분하여 그 실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요컨대 본 강의의 목표는 한국에서 공유재인 수산자원에 대하여 소유권이 형성되고 근대적 형태로 법제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유재인 전통적 어업권이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관리되었으며, 한말과 식민지기를 거쳐 구래의 어업권이 현대 수산업법 형태로의 이행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둘째, 근대적 어업권 제도가 현실에 적용되면서, 이에 상응하여 조선의 전통적 어업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가, 셋째, 어업권의 종류, 취득, 처분 등 어업권 통계로부터 당시 식민지기의 어업의 현황은 어떠한 모습으로 파악되는가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한국 수산업에 대한 주제를 강의에 포함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마지막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GDP, 생산량, 수출입 등 경제 통계로부터 한국경제에서 수산업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주차별 강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주차는 조선 후기 수산업과 조세제도에 대한 고찰, 2주차는 조선 후기 사료를 통한 수산업 실태 파악, 3주차는 한말의 어장 이용 실태, 4주차는 근대적 어업법 형성과 적용에 따른 한국 전통적 어업 질서의 변화, 5주차는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과 어업권의 소유권 변동 양상, 6주차는 보론으로서 수산업의 발전과 한국경제입니다.

참고로 이번 한국 수산업 발전사 강의는 저의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의 근대적 어업권 형성과 법제화'의 주요 성과를 강의 형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6차례의 강의를 여러분들의 한국 수산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학문적 시야를 확장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조선 후기 수산업과 조세제도입니다. 본 강의는 조선 시대 대표적인 관찬사료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일성록(日省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법전으로서는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 『경세유표(經世遺表)』를 활용하여 조선 시대 수산 관련 조세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강의 주제의 조선 시대 어업 관련 조세제도 중 경국대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2 조선시대 어업관련 조세제도 : 경국대전

지난 시간에는 한국 수산업의 발전사 강의 전반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시대 어업 관련 조세제도 중『경국대전(經國大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는 산림(山林), 어전(漁箭) 등 산림천택(山林川澤)에 대해 '여민공지(與民共之)'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산림천택은 고려 시대 사점(私占)의 대상이었으나, 조선조에 들어서는 이들 영역에서 백성들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왕조 초기 확립된 토지(土地) 국유제(國有制)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조선 초부터 사전(私田)의 철저한 통제를 바탕으로 실현된 과전법(科田法)은 한국사 최초 전국적으로 성립된 국전제(國田制)였습니다. 국전제는 이른바 "넓은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고, 바닷가 온 땅 위에 왕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다"로 왕토사상(王土思想)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조선 초 왕토의 범주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공유자원인 산림천택이 포함되었으며, '여민공지(與民共之)', 즉 그 이익을 '백성과 함께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민공지의 대상 중 바다에는 해세(海稅)가 부과되었습니다. 조선 시대 해세(海稅)는 백성들의 바다 이용에 대한 수세 조치로 '어염선곽세(魚鹽船藿稅)'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차 산업 중심의 전근대 사회에서 농업이 이루어졌던 토지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토지는 전근대 시기 가장 중요한 재화였던 곡물을 생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유형의 투입재입니다. 따라서 생산의 토대가 되었던 전(田)과 답은(畓) 토지국유제에 의해 국가의 직접적인 수조(收租)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바다의 경우는 토지와 다르게 어전(漁箭), 염분(鹽盆), 곽전(藿田) 등 어획이 가능한, 즉 생산이 이루어지는 특정 수역을 대상으로 하되, 범위의 특징이 어려운 수역은 선박, 그물 등 생산수단을 수조(收租)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조선말까지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의 국제(國制)인 『경국대전』이 반포되기 이전 바다의 이용에 관한 수세조치인 해세에 관한 규정은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다의 이용과 관련된 조선왕조 초기의 기사입니다.





“사재감(司宰監)은 어량(漁梁)과 산택(山澤)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감(監) 2명 종3품이고, 소감(少監) 2명 종4품이고,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다. 감찰(監察)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되, 신이충(愼以衷)은 우도(右道)와 풍해도(豐海道)에, 박헌(朴軒)은 충청도에, 최호(崔濤)는 경상도에, 고휴(高休)는 전라도에 보내어 연해변에 있는 주군(州郡)의 염분(鹽盆)·염구(鹽區)·어량(魚梁)·수량(水梁)을 답사하여 소출의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서 세를(稅) 정하여 장적(帳籍)을 만들게 하였다. 삼사(三司)에 명하여 각도의 경차관(敬差官)과 함께 바다를 끓여 졸이고(煮海) 모래를 굽(燻沙)는 염세(鹽稅)의 다소(多少)와 어량(魚梁)과 선세(船稅)의 다소(多少)를 조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어량(魚梁)과 산택(山澤)의 일은 사재감(司宰監)에서 관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재감은 고려조 사재사(司宰寺)의 업무를 계승한 조선 시대 관청으로, 어량과 산택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입니다. 그리고 사재감은 궁중에 쓰이는 생선, 고기, 소금, 연료 등을 조달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조실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태조 6년에는 연해변에 있는 주군의 염분, 염구, 어량, 수량을 답사하여 소출의 많고 적은 것을 헤아리고 세를 정하여 장적하고 있었습니다. 태조 7년에는 염세, 선세라는 용어가 실록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 공식적인 법으로 제정·반포된 자료는 아니지만, 조선 초기 법 제정의 주요 모체가 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경국전』은 태조 3년인 1394년 정도전이 지은 법전으로, 동 자료의 어염선세(漁鹽船稅) 부분을 통해 조선왕조의 초기 공유자원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경국전』은 서론과 육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대략의 요지를 담은 정보위(正寶位), 국호(國號), 정국본(定國本), 세계(世系), 교서(敎書) 등이 있고, 육전에는 주요 소관 업무를 나누어 다룬 치전(治典), 부전(賦典), 예전(禮典), 정전(政典), 헌전(憲典), 공전(工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유자원과 관련된 규정은 부전(賦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전에서 다루는 주요 규정은 총서(總序), 주군(州郡), 판적(版籍), 경리(經理), 농상(農桑), 부세(賦稅), 조운(漕運), 염법(鹽法), 산장수량(山場水梁), 금은주옥동철(金銀珠玉銅鐵), 공상세(貢商稅), 선세(船稅), 상공(上供), 국용(國用), 군자(軍資), 록봉(祿俸), 의창(義倉),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 건면(蠲免) 등이며, 여기서 어업과 관련된 부세는 염(鹽) 수량(水梁), 선세(船稅)입니다.







먼저『조선경국전』의 부전을 개괄한 총서 부문에 수록된 어업 관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부세로서 어업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군(州郡)·판적(版籍)이란 부의 소출이요, 경리(經理)란 부의 통제이며, 농상(農桑)이란 부의 근본이요, 부세(賦稅)란 부의 한납이요, 조운(漕運)이란 부의 수송이요, 염(鹽)·철(鐵)·산장(山場)·수량(水梁)·공장세(工匠稅)·상세(商稅)·선세(船稅)는 보조이며, 상공(上供)·국용(國用)·록봉(祿俸)·군자(軍資)·의창(義倉)·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이란 부의 소용인 것이요, 견면(蠲免)이란 부의 완화인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농상은 ‘부의 근본’으로 염, 철 산장, 수량 등은 ‘부의 보조’로 일컬고 있습니다. 조선 초에 어업과 관련된 부세는 국가 재정의 주된 원천이기보다는 보조적인 재원으로 위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경국전』의 부전(賦典), 산장수량(山場水梁)에는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망이 총총한 그물을 못에 넣지 못하게 하였고, 초목의 잎이 다 떨어진 뒤에야 도끼를 들고 산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것은 천지 자연의 이익을 아껴서 쓰고, 사랑하고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야말로 산장과 수량을 이용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전조에서는 산장과 수량이 모두 호강자(豪强者)에게 점탈되어 공가에서는 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전하는 즉위하자 전조의 잘못된 제도를 고쳐서 산장과 수량을 몰수하여 공가의 소용으로 하였다. 산장은 선공감(繕工監)에 소속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목을 채취하여 영선(營繕) 등에 이용하고, 수량은 사재감(司宰監)에 소속시켜 거기에서 나오는 어류를 채취하여 내외의 반찬과 제사 및 빈객 접대용으로 공급하였다. 산장과 수량의 소재지를 아는 대로 모두 적는다.”『조선경국전』 賦典, 山場水梁

“우리나라는 바다에 접근해 있으므로 어염(魚鹽)의 이득이 많을 뿐 아니라, 공·사의 조운(漕運)이 동·서의 강에 폭주하고 있다. 그래서 사수감(司水監)을 설치하여 이 일을 맡게 하고 선세를 징수하여 국가 재정에 보태고 있는데, 그 이득이 또한 적지 않다.”『조선경국전』 賦典, 船稅







동 기사는 산장과 수량을 이용하는 근본 원칙으로서 '망이(網) 총총한 그물을 금지하는 것, 초목의 잎이 다 떨어진 뒤 입산하게 할 것'등 공유자원의 갱신에 해가 될만한 과도한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고려조 호강자(豪强者)에게 점탈 되었던 산림과 수량이 조선조에는 공개(公家)의 소용(所用), 즉 공유재(共有財)로서 인민 모두가 향유 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공유자원에 대한 여민공지 원칙이 여기서 재확인됩니다.

또한 산림과 수량의 이용은 사재감에서 소관 하게 하였으며, 그 소재에 대해서도 동 관청이 파악,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도 일치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선경국전』은 국왕이 선포한 공식적인 규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도(道)의 어전(魚箭)·염분(鹽盆)은 등급을 나누어 장적(帳籍)을 만들어서 본조(本曹)·본도(本道)·본읍(本邑)에 간직한다. 장적(帳籍)에서 누락시킨 자는 장팔십(杖八十)에 처하고 그 이득은 관(官)에 몰수한다. 어전(魚箭)을 사점(私占)한 자도 같다. 어전(魚箭)은 빈민(貧民)에게 주되 3년이 되면 교체한다.”『경국대전』 戶典, 魚鹽

조선왕조가 인민의 바다 이용에 대해 법적으로 천명한 최초 공식적인 규정은 1460년의『경국대전』입니다. 산림천택에 대한 규정은 호전(戶典), 어염조(魚鹽條)에서 확인됩니다. “제도(諸道)의 어전과 염분을 분등 성적(成籍), 즉 염분을 등급별로 구분하고 장부에 적시하여 호조와 해당 도읍에 비치하고, 어전은 3년 기한부로 빈민에게 급여한다”고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국대전』의 해세에 관한 수록 내용은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세율, 부과 대상 등 구체성이 결여되어, 당시 해세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자료입니다.

이는 조선에서 1746년 『속대전(續大典)』이 반포되기 전까지 해세의 규모, 대상, 그리고 수세 방식에 대해 국제(國制)로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후 살펴볼 강의 내용 중 하나인 조선 후기 해세 관련 수세 규정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달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국대전』은 상세(商稅)와 선세(船稅)를 구분한 『조선경국전』과 비교해 볼 때도 그 구체성이 떨어 집니다.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경국대전』은 조운과 관련하여 수상(水商), 즉 바다의 상인에게 상세 (商稅)를 수세 한다는 것 이외 어선에 대한 수세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세에 대한 언급도 왜선(倭 船)에 대해서 배의 크기에 따라 대, 중, 소로 구분하고, 이에 입각하여 입어료(入漁料)를 정한 수준에 불과 하였습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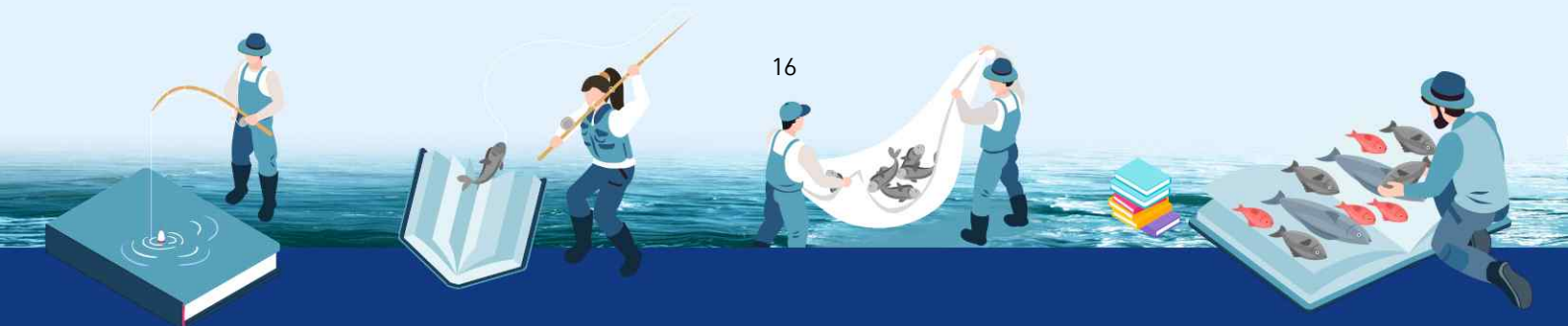
“행상(行商)에게는 로인(路引)을 발급하여 주고 수세(收稅)한다. 육상(陸商)은 매월 저화(楮貨) 8장(張), 수 상(水商)은 대선(大船)이 100장(張), 중선(中船)이 50장(張), 소선(小船)이 30장(張)이다. 고도(孤島)·초도 (草島)에서 고기를 잡는 왜선(倭船)은 세(稅)를 받아 대선(大船)은 어 (魚) 200마리, 중선(中船)은 150마 리, 소선(小船)은 100마리를 받는다. 포(布)로 바꾼다.” 『경국대전』, 戶典, 雜稅

조선 초기 어업에 대한 조세제도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조세원으로 어업이 농업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것도 한 이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량으로써 수산물은 주식이라기보다 부식에 가까우며, 산출이 일 시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식량 또는 재화로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어획한 직후부터 수산물은 부패하기 때문에 어획된 수산물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유지하려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 즉 냉장 기술이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즉 수산물은 신속한 유통 및 저장 체계 와 결합 될 때 상품으로서 그 가치가 실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주곡을 생산하는 농업에 비해 부세 대상으로서 어업의 가치는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생산의 불확실성, 높은 저장처리 비용, 상품화의 난이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어업은 왕조 입장에 서는 조세원으로서 유인이 낮았던 것입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조세체계 수립 대상으로 농업보 다 차순위에 두는 것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좌정승 하윤(河崙) 등이 민폐(民弊)를 제거하는 몇 가지 조목을 올리었다…(중략)…혹은 백성을 모아 배 를 만들어 선세(船稅)를 거두는가 하면, 어랑(漁梁)을 만들어 어리(漁利)를 거두고, 또는 숯을 묻어 탄가(炭 價)를 거두기도 하며…(중략)…어랑에서 이익을 독차지하여 백성이 손을 못 대게 하는 자는 엄히 금단하소 서. 그리고 백성으로 자원(自願)하는 자는 어리(漁利)를 얻게 하되, 10분의 1을 세로(稅) 하고, 모두 도관 찰사(都觀察使)에게 보고케하여 그 수대로 출납(出納)하게 하소서.”





“어전마다 벼슬이 있는 사람 3인을 따로 정하여 감고(監考)시켜 잡은 물고기의 수량을 적어서 본 고을에 알려져 장부에 적어 두게 하고, 또 가을에 제언사(堤堰司)로 하여금 어물을 도합하여 세어 면포를 배정하되, 세 몫으로 나누어 두 몫은 어전을 지은 사람에게 주고 한 몫은 사섬사(司贍寺)에 상납(上納)하게 하소서.”

균역법 이전 해세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식은 법제보다는『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유추가 가능합니다. 우선 『태종실록』에 따르면 해세에 대한 과세 정보는 “백성으로 자원(自願)하는 자는 어리(漁利)를 얻게 하되, 10분의 1을 세로(稅) 하고, 모두 도관찰사(都觀察使)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그 수대로 출납(出納)하게”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어전의 세율 1/3로 건의하는 기사도 확인됩니다. 즉 해세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어출(漁出)의 향상성이 보장된 정치(定置) 어장을 대상으로 그 수확물에 대하여 정율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율은 1/3, 1/10 등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이는 전국적으로 해세가 규정된 균역법에 이르러서도 해소되지 못한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액세(定額稅), 정율세(定率稅) 등 조세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수 예측을 위한 생산량 파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조 이와 관련된 어획량 정보는 어업자의 진실성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관에서 이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19세기 정약용 또한『경세유표』에서 어업 생산량이 어업자에 의해 농간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변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때에 서생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어흥(漁興)에 직접가서 큰 고기를 사려고 하였더니 고기장사가 이것을 꺼리어 배꾼과 협잡을 부렸기 때문에 임통에 가서 제 눈으로 간수를 하였는데도 잡힌 것은 전부 잡어들 뿐이었다. 서운히 돌아와서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더니 그들이 웃으며 말하기를 “고기잡이꾼에게는 감쪽같이 고기를 감추는 요술이 있어서 직접 그 배를 탄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경세유표』, 균역청사목추의, 漁稅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지만 토지 산출물에 비해 어획 산출물의 불확실성은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에 어업에서 전국적이고 일률적인 조세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를 수립하기보다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어획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되어 온 관습과 전례에 의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위로부터 하달되는 일방적인 방식이라기보다 지역별 어리(漁利)의 비옥도와 계절별 어획의 풍흉에 따라 각 지역 관아(官衙)와 어업자(漁業者) 간에 상호 용인한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시대 어업 관련 조세제도 중 조선경국전, 경국대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시대 어업 관련 조세제도 중 속대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3 조선시대 어업관련 조세제도 : 속대전

지난 시간에는 조선 시대 어업 관련 조세제도 중 경국대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시대 어업 관련 조세제도 중 『속대전(續大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세(海稅)가 조선왕조의 법전에 본격적으로 규정된 것은 1746년『속대전』이었습니다. 『속대전』의 호전 어염조에서는 어선(漁船)과 어전(漁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세를 보다 세밀하게 규정한 균역법이 1750년에 제정되면서, 속대전의 해세에 대한 규정은 여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세액의 결정 기준은 생산수단인 배의 대, 중, 소 크기로 구분하였습니다. 어선세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규정을 취하고 있으나, 전라도와 강원도는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어전의 경우 전라도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으며, 이것이 전국적 규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속대전』은 균역법이 논의되고 있었던 와중에 반포된 것으로 해세 부문은 과도기적 형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균역법을 중요하게 다루다 보니, 속대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속대전(續大典)』은 과도기적 형태로의 균역법의 성립에 대한 여러 단서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당시의 어업사상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도 어전세(漁箭稅)는 대, 중, 소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연간 과세량이 대전(大箭)은 300마리, 중전(中箭)은 150마리, 소전(小箭)은 75마리입니다. 또한 25마리당 면포 1필과 환산하여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은 12필, 중전은 6필, 소전은 3필에 해당됩니다.

어선세는 전국적인 규정이지만 전라도와 강원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전과 마찬가지로 어선세는 배의 크기에 따라 대, 중, 소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대전은 면포 3필, 중선은 면포 2필, 소선은 면포 1필, 소지소선(小之小船)은 0.5필이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대구어로 납부할 경우 완선(完船)은 20마리, 완선의 절반 규모가 되는 반파선(半破船)은 10마리가 할당 부과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포(布)로 환산하면 완선은 2필, 반파선은 1필이었습니다.





해세의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기요람(萬機要覽)』의 작전식(作錢式)에 따르면 포 1필은 전(錢) 2량(兩)으로, 전라도 어전 중 대전에 부과된 해세는 '진어(眞魚) 300미(尾)= 면포(綿布) 12필(疋)= 24량(兩)'으로 환산되는데, 같은 방식으로 중전은 12냥, 소전은 3냥이었습니다. 이로써 전라도의 어전(漁箭) 가운데 대규모의 것은『속대전』의 대선 4척에 대한 해세 규정과 동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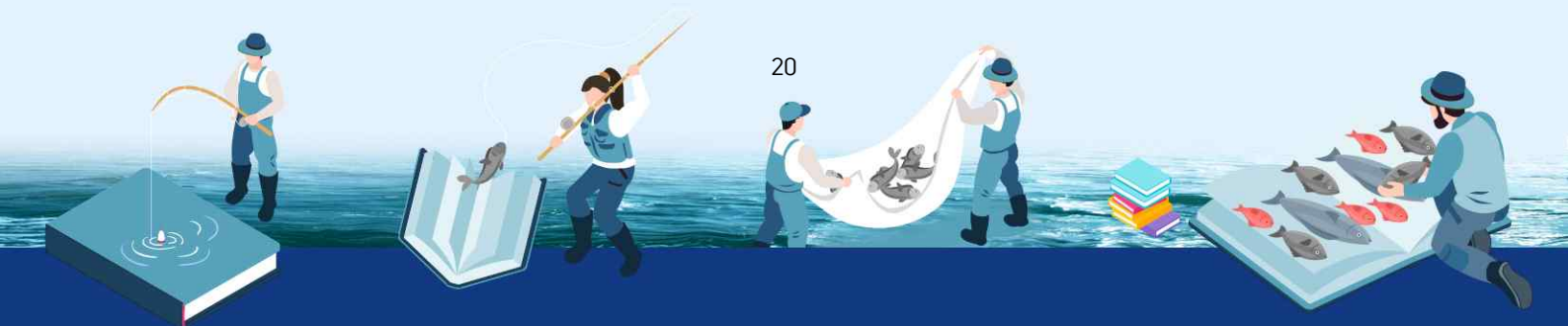
당시 대규모 어전은 어선보다도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낮은, 즉 일정 생산이 보장된 생산의 항상성이 세율에도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의 부과 규모로부터 조선 후기 어전 어업의 생산성이 높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속대전』은 어염세의 부세 체계 이외에도 중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부세(賦稅)의 대상, 징세방식(徵稅方式), 중세금지(重稅禁止) 등 바다의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속대전』어염조의 기사입니다.

“호조(戶曹)의 어전(漁箭), 어선(漁船), 염분(鹽分), 정액수중(定額數中)에서 파손(破損) 또는 망실(亡失)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관은 감영(監營), 병영(兵營), 통영(統營), 수영(水營)의 소속을 막론하고 모두 파정(罷定)을 허(許)하되 결액(闕額)을 족내(族內)에서 징수하는 폐단이 있으면 당해 관원은 본도(本道)에서 결장(決杖)할 것을 지령(指令)한다. 절수처(折收處)는 각진(各鎭)의 소거사율(所居士率)로 하고 모두 어세를 건감(蠲減)한다. 포작간선(鮑作干船)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방어긴용(防禦緊用)이므로 수세(收稅)하지 아니한다. 어염세(魚鹽稅)를 횡침(橫侵)하거나 이중삼중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논죄(論罪)한다. 사수전망처(斜水箭網處)에는 경계를 설정하고, 표주(標柱)를 수립하여 납세는 1처에 소속시키고 타처에서는 이중으로 징세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차인(差人), 감관(監官), 색리(色吏)는 장1백에 처하고 정배(定配)하여 관원은 계문(啓問)하여 파면(罷免)한다.”

『속대전』어염조

기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속대전』에서 이전의 『경국대전』보다 보완된 부분은 망실, 중세에 대한 금지 규정입니다. 호조에서 관리하되 어전, 어선, 염분이 지방 현지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라 어장이 손실되어 없어졌을 경우 부족액을 허하는 등 망실된 어장에 과세하여 발생하는 폐단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포작간선에 대해서는 방어에 소용되는 중요한 자원임을 인정하여 수세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포작간은 신량역전(身良役賤)으로 포작(鮑作)이라는 업에 종사하면서 국가의 진상역을 담당하였던 이들에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주로 제주도를 근거지로 공물의 상납을 담당하였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속대전』에서의 포작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방어긴용(防禦緊用)으로 그 용도를 방어업무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의 신역(身役)으로 진상 물자를 조변하면서, 동시에 수군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된 자들에 대해서는 수세를 면하는 특혜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 규정은 다음에 살펴보는 균역법 선세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요컨대 『속대전』은 기존의 『경국대전』에 형식적으로 언급된 해세 규정을 본격적으로 법제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다가 궁방과 아문에 사점됨에 따라, 수세 주체가 중첩화되고 있는 당시의 바다를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그 내용에는 바다에 대한 수세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정교화하려는 과도기적 단계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시대 어업 관련 조세제도 중 속대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시대 어업 관련 조세제도 중 균역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4 조선시대 어업관련 조세제도 : 균역법

지난 시간에는 조선 시대 어업 관련 조세제도 중 속대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세(海稅)를 잡세의 영역이 아닌 주요 중앙 재정원으로써 편입시킨 획기적 어업 수세 정책인 『균역법(均役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역법은 18세기 영조에 의해 시행된 양역 개혁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래에 1정당(丁當) 연간 2필씩 수취하던 군포를 1필로 반감시킨 조치로, 그 부족 재원은 결작미(結作米),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해세(海稅) 등 새로운 세원으로 보충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결작미는 경작지이지만 토지대장에 누락된 은여결(隱餘結)에 대한 수세 조치이며, 선무군관포는 선무군관의 칭호로서 피역자(避役者)를 균역체제에 포섭시켜 군포를 징수케 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세는 기존에 잡세로 분류되었던 어염선세를 조사하고 균역청으로 소속시킨 조치였습니다.

균역법에 대한 초기 연구는 균역법이 성립되는 과정과 개혁책으로서 균역법의 성공 여부, 즉 신설된 세목의 세입 증가가 항구적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다양화된 급대재원(給代財源)이 실질적으로 인민에게 양역(良役)의 경감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세목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균역법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균역법의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위해 실체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균역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선행되었지만, 해세(海稅)라는 제도사적 측면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양역개혁책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해세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균역법은 조선왕조기 어업 관련 세제의 전국적 법 규정으로 그 의의가 큼니다. 이에 균역법의 시행으로 파생된 어업 소유관계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균역법의 급대재원 중 하나인 어염선세를 중심으로 균역법이 어업 소유체제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다에 대한 궁가와 아문의 사점과 절수 혁파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균역법이 양역개혁책을 넘어서 바다의 사적 점유 부문까지 개혁의 범위로 포괄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본 강의는 동 조치를 해세제도의 성립 측면에서 재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균역법의 해세 관련 주요 내용은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에 의하며 다음의 표로 요약됩니다. 균역법에서 규정한 해세는 우선 지역적으로는 호서, 경기, 호남, 영남, 황해, 평안 등 전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부과 원칙은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일반 공통규정과 지역별 특수규정으로 나뉩니다.

일반규정으로는 크게 바다에 고정 어구를 설치하는 정치(定置) 어구(漁具)와 어장(漁場) 그리고 어선(漁船)에 대한 과세로 구분됩니다. 수세 대상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균역법하 해세제도 이전에 존재했던 형태였으며, 앞서 살펴본 『속대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속대전』은 전국적인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균역법하 해세제도와 차별적이었습니다.

균역법하 해세의 공통적인 수세 방식은 지역별로 어전, 어조, 어장, 어기, 어선 등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세액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경세유표』<sup>14</sup>, 균역사목추의, 어세 부분에 수록된 어업 관련 용어를 활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전 어업은 어로를 따라 대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 막다른 곳에 임통, 즉 통발과 같은 함정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조(漁條)는 물고기 떼가 먼 데서부터 지나가는 회유로가 있는데, 여기에 배를 멈추고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마치 한 갈래 길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조라고 합니다.

어장은 넓은 바다 가운데 어족이 집결한 곳에 크고 작은 어선들이 물을 쫓아 그물을 쳐 놓은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기(漁基)는 지형이 편리하여 고기잡이에 적합한 곳에 큰 배를 중심으로 작은 배들이 호위하여 잡는 방식을 칭합니다. 자리가 좋다 하여 어기라고 합니다.





표에서 확인되듯이, 어전, 어조, 어장, 어기, 어선에 대한 지역별 부과 등급과 부과세액은 각각 상이합니다. 어전은 호서 3~40냥, 호남 1~3냥, 경기 7~24냥, 황해 2~20냥, 평안 2~15냥으로 호남이 가장 적고, 호서가 가장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장 높은 세액은 황해도에서 청어전(靑魚箭)에 대해 40~250냥을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역법하 해세제도는 공통규정 이외에 지역별 특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되듯이 주박(注朴), 망기(網機), 방렴(防簾), 온돌(溫堦) 등 지방별로 해역의 특징에 따라 발달된 정치 어업에 대한 해세 부가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경세유표』<sup>14</sup>, 균역사목추의, 어세 부분에 수록된 어업 관련 용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박(注朴)은 서해안의 지세를 이용한 어구어법으로 새끼줄로 만든 망을 조수간만의 차가 큰 특정 지역에 둘러 펼쳐서 어획하는 방식입니다. 주박은 어전과 유사하나 어전보다 효율성이 높은 어업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망기(網機)는 일종의 정치어망이나 그 종류는 불분명합니다. 방렴(防簾)은 어전과 유사한 어망인데 경상도 연안에서 주로 발달한 어구어법을 일컫습니다. 온돌(溫堦)은 주박과 유사한 어구로 한말에는 주목망(柱木網)으로 통칭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역법하 해세의 모든 세액 부과는 동전으로 통일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대동법을 계기로 조세가 금납화되는 경향이 균역법에서도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같은 영조대에 반포된『속대전』의 어염조에는 미(米), 포(布) 또는 현물로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처럼 각 지역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해세의 수세 방식은 영조가 파견한 관료들이 조사한 각 지역별 해세제도가 그대로 법에 수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조는 균역법 시행에 있어 지역별로 이미 존재하여 시행되고 있었던 어세를 포용하되, 일부 수취 방법은 통합하여 단순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별 차별화된 수세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내용상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산은 『경세유표』에서 “선세에서는 평안도를 슬쩍 빼 버리고, 염세에서는 경상도를 슬쩍 생략하였는가 하면, 어흥세는 호남 세율을 슬그머니 없애버렸다”고 형평성 부재와 무원칙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균역법하 해세제도는 세원조사라는 과정을 거쳤지만, 조세제도로써 통일적이고 완벽한 기준이 불비한 미완적인 형태였던 것이었습니다.

표에서 확인되듯이 균역법하 해세의 특징은 한눈에 보아도 지역별로 수세 대상, 수세 방식, 수세액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통일성이 결여된 수세 원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균역법하 해세제도는 조선 시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던 어업 관련 수세제도를 그대로 흡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사료에서 확인되듯이 균역법하 해세제도는 제도로써 완성되기까지 전국적인 조사가 선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 통일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존의 어세제도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달된 것을 확인하는 것에만 그쳤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혁책도 어업에 대한 일률적인 조세 성립을 관철시키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균역법하 해세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점의 혁파와 급대재원의 확보에 있었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영조는 바다의 이용에 대한 공정한 수세 부과보다는, 궁가와 아문에 의해 사사로이 사점되어 누수되고 있는 세원을 파악하여 국가 재원으로 확보할 목적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다음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염선세(魚鹽船稅)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싸여 있는데 어염의 이익이 모두 사문(私門)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숙묘조(肅廟朝)에서 별도로 하나의 관사(官司)를 설치하여 오로지 수습(收拾)하는 것을 관장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대신의 건백(建白)으로 인하여 박문수·김상적·이후 등을 영남(嶺南)·관동(關東)·해서(海西)·기내(畿內)·호서(湖西)·호남(湖南) 등 제도(諸道)에 나누어 보내어 살펴보고 나서 세금을 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상적이 해서에서 병으로 졸(卒)하였으므로 황정(黃晳)이 명을 받들어 해서의 여러 고을을 살폈으며, 기내·관서·관북은 도신(道臣)을 시켜서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여러 궁가(宮家)에서 절수(折受)한 어전(漁箭)과 소속된 선척(船隻)을 혁파하여 일체로 세금을 징수하게 하였으며, ‘진실로 백성을 위하여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면 내가 몸과 터럭인들 어찌 아끼겠는가?’라는 하교가 있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실로 천고에 있지 않던 성대한 일인 것입니다.” 1752년 1월 13일『英祖實錄』







결국 조선왕조는 지역별로 일정량의 해세를 할당하여 거두는 비총제(比總制)를 실시하였고, 이는 징수를 기존의 지역 납세 관행에 맡긴 채 중앙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셋째, 지역별로 통일되지 못한 해세제도는 당시의 어업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균역법하 해세의 각 지역별 수취 내용을 통해 각 지역에 발달하고 있었던 어업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서지방은 주박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주박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 지역에서 발달된 지형 의존형 어구어법입니다. 호남의 경우는 어장에 대해 등급 부여를 하지 않고 20~40냥의 정액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광군 파시평(波市坪) 등 서해안에 발달하고 있었던 조기 어장의 입어로로 유추됩니다.

다른 자료를 확인해 보면,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서는 호조판서 이시방은 전남 감사가 올린 상소를 근거로 궁가나 아문은 물론 파시평에서 세금을 거두는 선척은 모두 1동씩의 세를 거두어 호조에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이라는 단위는 조기 1,000마리, 청어 2,000마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 어부들은 상사(上司)·궁가·아문이 관할하는 사수(卸水), 어장세 및 호조 소관인 파시평지세(波市坪地稅) 모두를 감해 줄 것을 청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당시 회유성 어류가 군집하는 특정 해역, 즉 어장이 발달된 지역에서는 자원을 이용하고 획득하는 대가로 입어로 성격의 어장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정액세는 파시평과 같이 전례부터 어류가 회유하는 지역, 즉 해역 가운데 경험적으로 어획의 확실성이 보장된 지역에서 발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영남의 경우는 정치성 어구로는 방렴(防簾)이 발달한 것이 확인됩니다. 아울러 주로 비교적 먼바다에서 이동성이 강한 어류를 대상으로 한 어업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청어어장(靑魚漁場), 문어어장(文魚漁場), 강어장(江漁場), 양중거휘리(洋中擧揮羅), 양중거처조(洋中去處條) 등 다양하게 부세 대상을 구분하여 수세하고 있으며, 방식은 정률세, 정액세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특히 문어어장과 강어장은 어획량에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정률세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경세유표』의 균역청사목추의 어세 부문에서 5분의 1세 규정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음의 자료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옛 조례에 의하면, 어수와 어흥에서 대구나 청어를 잡는 자에 대하여 기장현에서는 5분의 1세를, 동래부에서는 8분의 1세를, 통제영에서는 3분의 1을 받았는데, 세액이 고르지 못하므로 여기에서는 중간을 취하여 5분의 1세를 적용한다. 창원의 강 어장에서는 옛날 조례에 의하면 고기를 잡는 대로 세금을 징수하였고, 본래 정한 액수가 없었는데 지금 역시 5분의 1로 세율을 정하였다.”

『경세유표』 균역사목추의, 어세

이를 통해 균역법하 해세제도는 기존의 세원 조사결과를 계승하되, 수취세율은 보다 단순화하여 통합된 기준을 취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한편 영남지방에서는 바다 가운데에서 어획이 행해지는 ‘양중거처조(洋中去處條)’와 ‘양중거휘리(洋中擧揮羅)’에 대해 정액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면, 『경세유표』에 의하면 ‘거처조(去處條)’란 어장과는 구분되며, 어획 시기에 대구어 또는 청어철에 고깃배가 입어료를 지불해야 하는 어장이나 어수(漁遂) 혹은 어조(漁條)에 들어가지 않고 바다 가운데서 체재하면서 고기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중(洋中)’은 말 그대로 바다 가운데를 의미하는데, 어장을 확대시킨 개념이었습니다. 또한 물고기를 잡는데 쓰이는 큰 그물인 후릿그물을 쳐서 어획하는 양중거휘망은 역시 무주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조치였지만, 어획 효율성이 높은 어구를 특정한 것입니다.

‘양중거처조’와 ‘양중거휘리’에 대한 수세는 영남지방을 어업기지로 하여 비교적 먼바다까지 어획을 할 수 있는 어선과 어군을 둘러싸 포획할 수 있는 대규모 어망 등을 의미하며, 이는 생산수단과 포획된 대량의 어획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 조직이 함께 발달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세는 표와 같이 어선만 따로 구분되어있지 않았고, 지역별로 선박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통일된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요약하면 조선 후기 균역법은 해세제도의 전국적 성립이라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균역법하 해세제도는 부족한 세원을 충족할 목적으로 마련되어,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기준을 갖추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상이한 세원(稅源)은 조선 시대 어구어법의 발달과 더불어 이에 대한 조세체계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강의로 조선 후기 수산업과 조세제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선 시대 어업 관련 조세제도가 경국대전, 속대전, 균역법을 통해 변화하는 양상을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그 특징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사료로부터 본 조선 후기 수산업의 실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1

## Fisheries and Tax System of the Late Joseon Period

1-1

### Course introduction

Nice to meet you students. I am Song Kyeong-eun, the instructor of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in Korea> course. In this first lesson, we will take a look into the fisheries and tax system in the late Joseon Dynasty period.

Let me first introduce this course about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in Korea. The subject of this course is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in Korea seen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a fishery law.

Korea is a peninsular state surrounded by water on three sides. As you can see here, Korea is stretched long to the north and south, surrounded by the East Sea on the east side, the West Sea on the west side, and the East China Sea and the Straits of Korea on the south side.

The Amnok-gang River and Duman-gang River border between the northern part of the peninsula and China and Russian Federation; there is the Jeju-do Island in the south and the Ulleung-do Island in the east and there are approximately 3,962 islands are the part of the peninsula. The East Sea of Korea is located on the boundary of a water mass where cold and warm currents are mixed, making it a so-called golden fishing ground with abundant prey nurtured by rich dissolved oxygen and nutritive salts.

In such a natural environment of Korea, fisheries, a primary industry, had long been one of the essential industries before the Joseon era. Moreover, fish collected through fishing activities were the primary foreign currency source during the Korean War when Korea faced economic difficulties. In the past, fisheries greatly supported and contributed to Korea's economy.







Every state has its territory on land and territorial waters on the sea. The subject of this lecture is 'fishery law' which is a fundamental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he territorial waters, the coastal fisheries of a state; this lecture mainly deals with the time from the late Joseon period to the Japanese colonial rule era when the prototype of the modern Fisheries Act was established. Notably, I would like to pay attention to 'fishery resources' which are the object of collection in the fishery industry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n other words, I would like to focus on their value as shared resources and will include this in the lecture as a major topic.

Let us first take a look at the basic concept of fishery resources, which is the main keyword of this course. Living creatures subject to collection or farming due to their industrial usefulness for humans among pelagic organisms living in water are called marine living resources in general. Marine living resources which are directly used by humans currently are called fishery resources.

Let's take a close look into fishery resources first. Fishery resources are natural resources that have a unique biological characteristic of self-regulating resources, as well as shared resources as economic goods at the same time. Natural resourc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exhaustible, nonrenewable resources which cannot be renewed and inexhaustible, renewable resources which can be renewed.

The key characteristics of exhaustible, nonrenewable resources is that it is exhausted as it is used, because its potential quantity is limited. The most typical examples of exhaustible resources include mineral resources such as gold, silver, coal, and petroleum. On the contrary, inexhaustible resources refer to the resources that are constantly replenished and renewed automatically regardless of human efforts. For example, sunlight, air, fish, and forest are the most well-known inexhaustible, renewable resources, which are constantly replenished and renewed on their own through the circulation function of nature.





Renewable resources are then divided into self-regulating resources and nonself-regulating resources. Self-regulating and non-self-regulating resources are distinguished by whether their amount changes following the rate of usage by humans and then whether the change in the amount affects their renewal in return.

Non-self-regulating resources are constantly renewed regardless of humans' use of them. This means the renewal ratio is constant; sunlight, air, and rain are typical examples of non-self-regulating resources. They do not have economic values as commodities, but they have the characteristic of public goods of non-excludability and non-rivalry. Non-excludability means that other people cannot be excluded from using certain goods and non-rivalry means that competition is not caused even when many people use certain goods together.

On the contrary, self-regulating resources are distinguished from non-self-regulating resources in that their future amount may change following human use, even though they are constantly-replenished renewable resources. The "Tragedy of the Commons", suggested by Hardin, is the most well-known term that explains that the excessive use of self-regulating resources over its renewal rate could lead to the exhaustion of the resources. Self-regulating resources include forests, grass, fish, water quality, wild animals, etc., and they have the quality of shared resources as commodities.

Fishery resources are shared resources. Shared resources can be characterized by non-excludability and rivalry. Non-excludability means that it is not impossible to exclude other people from using certain goods, but considerable costs should be spent technically for such a purpose.

In economic terms, goods with such a characteristic are more efficient when the community members share them all, rather than when they are owned by a certain person. That is a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of public goods.





What differentiates common-pool goods from public goods most significantly is that individuals' consumption affects the consumption of the entire members of a community. This is referred to as rivalry, a general characteristic of private goods. For your reference, private goods are commodities that have both excludability and rivalry, for which people who have not paid the cost may be excluded easily and one person's use of them makes other's people's use of the same goods impossible.

Generally, 'exhaustion' is a starting point and key topic in environmental or natural resource-economic discussions on shared resources. Research on the ownership system of shared resources began when they started to be recognized as important commodities in economics. As socioeconomic issues regarding the use of the environment in human society such as exhaustion and contamination of resources took place and this worked as a factor that inhibited the economic activities of men, economics began to pay attention to shared resources.

The mainstream perspective on the management of shared resources focuses on the fact that Hardin's "Tragedy of the Commons" is inevitably caused, if reasonable institutional system or measures lack when rivalry between users intensifies and conflict is caused for the use of commodities. Hardin suggested privatization or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of shared resources as the solution to the Tragedy of the Commons; generally, the analytic frame and management system based on such perspective are still maintained in many countries.

Let me explain how research on shared resources has advanced in detail. Research on shared resources continued in mainstream economics based on early neoclassical theory and then branched into two streams. One is market supremacy based on an approach in terms of property right, which insists on giving complete responsibility to the market. The other is an approach focusing on resolving environmental issues based on material balance, such as cost-benefit analysis. Notably, the latter approach adopts a resource management methodology under government intervention.





In recent research on shared resources, the biological perspective has been added to the neoclassical theory, to evolve into bioeconomics which focuses not only on simple cost-benefit relation but also mutual dependence betwee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environment.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bioeconomics and the mainstream economics is that it does not regard the ecosystem as an independent element, but believes that it evolves commonly with the socioeconomic system while affecting one another.

Bioeconomics emphasizes that the future amount of resources that have the feature of self-regulating resources such as fish and underground water is not irrelevant to what is happening now, but is co-related with the current amount of their use. Therefore, bioeconomics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future amount of self-regulating resources changes following the amount of their use by humans and on the prediction and management of those resources based on such characteristic.

In short, economic discussions on the use of shared resources which began from the "Tragedy of the Commons" and continued to "bioeconomics", are developing toward advancing the method of measuring the appropriate amount of resource consumption, to enable sustainable use of resources. However, the principal agent that establishes and implements policies for the management of shared resources at that point is still governments and researchers point out that the focus is still put on the efficiency of systematic management at a government level.

More recent research pays more significant attention to economic discussions of proving the efficiency of local and autonomous management regarding the use and management of shared resources. E. Ostrom suggested a self-governing system of communities as a solution for the use of shared resources which can prevent the "Tragedy of the Commons." Ostrom received the Nobel Prize in economic sciences in 2009 for that topic.







He goes beyond the stance of classical economics which had a divided approach with different focuses on market and state regarding the governing system for shared resources, to find out many cases of cooperative management of shared resources based on an agreement between the members of a community and then to prove the efficiency of such system. He also argues that a public system governed by states and a private system governed by communities can cooperate co-dependently to manage shared resources efficiently and such cooperative system can lead to the sustainable use of resources.

Ostrum's argument is based on diverse case studies on managing natural resources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passed down in communities. That is because community ownership that utilizes empirically-learned knowledge regarding human use of nature better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natural resourc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cosystem.

The key point of active research on community ownership of shared resources recently is the human effort to effectively resolve the issues of "competitive use" and "resources exhaustion" which ar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shared resources. Ostrum summarized long-lasting resource management methods based on analyzing of various cases of using shared resources and suggested eight generalized principles.

First, clearly defined boundaries shall exist regarding what the resource is and who its legal user is,

Second, rules regarding the use and effort-cost of resources shall be appropriate for the local community,

Third, people affected by the creation and correction of rules sha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Fourth, resources used by users and its amount shall be constantly monitored,

Fifth, the degree of punishment for repeated violation of rules shall be applied progressively.

Sixth, dispute-resolving mechanisms shall be designed to be swift and incur low cost,

Seventh, rules autonomously created by local users shall be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and shall not be intruded,





Eighth, the management system for shared resources shall be organized into multi-level and coherent operating units.

The first principle—a clearly defined boundary regarding what the resource is and who its legal user is—includes the concept of how the ownership system for shared properties is concluded in detail. For example, there is no clearly defined boundary regarding the resource and its legal user. In that case, shared resources become subject to open access, which increases the likelihood of excessive consumption, that is, exhaustion.

From the recent research result mentioned before,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ownership system of shared resources is a very important research subject, as the prerequisite for sustainable use of shared resources without exhaustion. Under such awareness, this lecture examines a series of historical processes for forming an ownership system for fishery resources—shared resources—from the late Joseon period until the Japanese colonial rule.

We have seen how research regarding shared resources has advanced so far. Now let me focus on the subject of my lecture.

How did the official system of recognizing the ownership system for the seas of Joseon develop and what was it like in reality?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the first topic of this lecture. During the Joseon dynasty era until the end of the dynasty, shared resources were basically the king's property, while the mechanism of the state's authorization of the occupancy and use of the sea was to register and impose a tax on them as in the case of land.





The tax was imposed on the means of fishery production like fishing boats and places of production such as fishing weirs and brown kelp grounds in the sea. This system was implemented nationwide based on the maritime tax system under the Equalized Tax Law in 1750. Therefore, this first lesson will examine the maritime tax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and what historical meaning the system ha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fishery ownership system of Joseon.

In a broad sense, all the seas and rivers, that is the water system, are shared resources, but as all types of goods and resources are so, they come to have economic meaning from their yield and value. This is because not all water systems, seas, are fishing grounds.

For a place to become a fishing ground, economically valuable aquatic animals or plants should live or migrate there, collection and nurturing of useful animals and plants should be technically possible there, and the collection and nurturing of valuable animals and plants should be possible there economically.

Whether a competitive use of shared resources in the water system, the sea, occurs is related to the economic value of the fishing ground, which means the fishing ground should be a place where the amount of resources is rich and fishing is technically possible. From old times, the private ownership system for the water system, the sea, was relevant to the economic feasibility of fishing grounds.

That is why it is the second key topic of my lecture to clarify the forms and methods of the use of resources which enabled the primary development of the ownership system of fishery resources based on actual cases and historical records, as well as to prove the historical process of its advancement into a modern fishery right system, that is, the link between the two. That topic will be covered in the second and third week's lectures.





A modern ownership system regarding fishery in Korea was introduced in the Fishery Act in 1908 and Fishery Ordinance in 1911. In contemporary times as well, exclusive fishery rights granted by states are categorized into licensed, permitted, and reported fishery businesses, and this was part of the modern ownership system for natural resources which was introduc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cluding the Forest Ordinance and Mining Ordinance.

The introduction of a modern ownership system categorized into licensed, permitted, and reported fishery business based on the enforcement of the Fishery Act and Fishery Ordinance in the early 20<sup>th</sup> century enabled the exertion of rights on fishing grounds only through the legal obtainment of fishery rights. In addition, though partially, a legal restriction of the use/profit/disposition of the resources only for communities, not individuals, was included there, which meant an establishment of a new type of owner.

The origin of such a system was the exclusive fishery management system for inshore community fishing grounds in Japan and this was downsized and modified for application to colonial Joseon. As we have already seen from Ostrom's research, the community ownership system for the fishing industry that catches fishery resources is an important solution to prevent shared resources from exhaustion in contemporary times too, and this is the third topic of my lecture.

This will be covered in the fourth week's lecture, in which I will explain the series of processes of community ownership's creation in implementing a modern licensed fishery system in Korea.

Next, the fourth topic of the lecture is the overall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Fishery Act and the Fishery Ordinance in Korea in early 20<sup>th</sup> century. Many studies have agreed that the Fishery Ordinance established the modern fishery rights system in 1911. However, how it actually was has not been clarified yet.







What were the status and aspects of the issuance of fishery rights in the early stage of the modern fishery rights system? Who was the owner, an individual or a fishing community? Or did a small number of people share stakes? Were fishing communities developing traditionally in later Joseon times as argued by researchers so far? How were they accepting the institutional change of modern fishery rights during the colonial era? What were the types of fishery rights owned by them? Did fishing communities exist in reality?

To answer these questions, in the fifth week's lecture, statistics about the fishery right system form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will be calculated based on Official Gazette's articles about fishery rights, to examine details of its reality by the type of fishery business and fishery right holders.

In short, the objective of this lecture i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ownership of fishery resources which are common-pool goods in Korea and the process of its legalization into a modern form.

First, how were the traditional fishery rights, common-pool goods, managed in terms of the system in Joseon times and how did the old fishery rights shift into the form of the contemporary Fisheries Act from the late Joseon time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era, Second, how was the order in Joseon's traditional fishery changing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of the modern fishery rights system in reality? Third, what was the fishery industry like back then, when seen from the statistics about fishery rights including the type, acquisition, and disposition of fishery rights?

Plus, as it is meaningful to include topics about the recent fishery industry in Korea in my lecture, in the last sixth lecture, the meaning of fishery industry in Korea's economy will be examined based on Korea's economic statistics including its GDP, production, export and import,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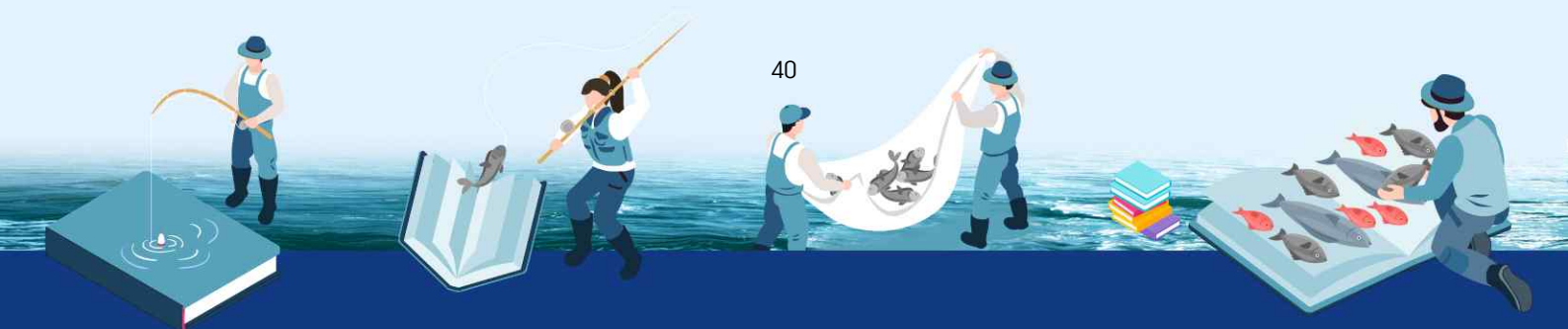
In detail, there are six different topics for each week's lesson. For the first week, the fishery industry and taxation system in late Joseon period will be examined; in the second week, examination of the status of fishery industry in the late Joseon time based on historical materials; in the third week, status of the use of fishing grounds in late Joseon era; in the fourth week, change in the order of Korea's traditional fishery following the formation and application of the modern fishery law; in the fifth week, introduction of the modern fishery law and trend of change in the ownership of fishery rights; and in the sixth week, as a supplementary discussion, development of fisheries and the Korean economy.

For your information, the content of this lecture on the development of Korea's fisheries was reorganized from the significant results of my doctoral thesis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Fishery Right and Legalization in Modern Korea". to have a broader academic view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s fisheries.

The first lesson is about the fisheries industry and taxation system in the late Joseon period.

In this lecture, the fishery-related taxation system of the Joseon era will be explained based on the most well-known government-published historical materials: 『Annals of the Dynasty of Joseon』, 『Records of the Border Defense Council』, 『Daily Records of the Royal Court and Important Officials』, 『Diary of the Royal Secretariat』, as well as legal codes: 『Code of Administration of the Joseon Dynasty』,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Supplementary Grand Code』, 『Office of Equal Service Lawbook』, and 『Design for Good Government』.

In the next lesson, we will discuss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to examine fishery-related taxation system of Joseon Dynasty, which is the first topic of my lecture.





1-2

**Fishery-related taxation system of Joseon period  
: Grand Code for State Admin**

In the last lesson, I introduced overall outline of this lecture on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in Korea. This time, we will take a closer look at Joseon's fisheries-related taxation system in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Joseon Dynasty had a principle of “sharing with the people” regarding mountains, forests, rivers, and lakes, including woods and fishing weirs. During the Goryeo Dynasty period, mountains, forests, rivers, and lakes had been privately occupied, but after the launch of Joseon Dynasty, people were allowed to engage in free production activities there.

This was related with the state-ownership of land, which was established in early times of Joseon Dynasty. Rank Land Law that was realized based on a strict control of private land from early times of Joseon was the state-ownership system of land established nationwide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he state-ownership system of land was based on the philosophy of royal domain: “There is no land that does not belong to the king under the sun and there is nothing that does not subject to the king all over the ocean and land”.

In early Joseon era, not only land but also mountains, forests, rivers, and ponds, which were shared goods, we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he royal domain and this is called “sharing with the people”, that is, “to share the profits with the public”. Among the object of “sharing with the people”, a maritime tax was imposed on the sea. The maritime tax during the Joseon era was imposed on people's use of the ocean, which was also called a “tax on fish, salt, boat, and brown kelp”.

In the premodern society centered around primary industries, land was an important resource as agriculture was carried out there. The land was an essential input for producing grains, the most important goods in premodern times. Therefore, fields and paddies that were the very foundation for production were subject to state's direct tax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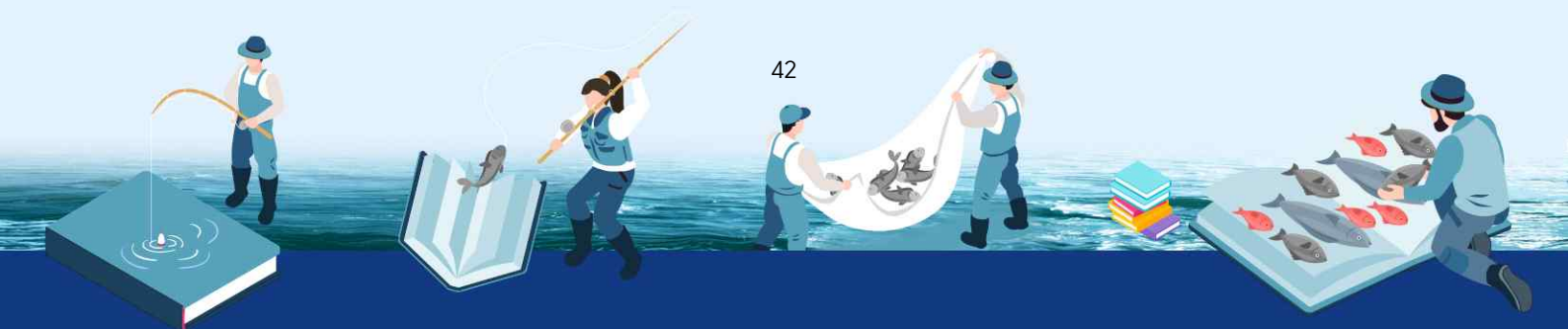


Contrary to land, certain waters out of sea where production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cluding fishing weirs, salt ponds, and brown kelp farms, were subject to taxation, while means of production such as boats and nets were subject to taxation for waters whose range was not specifiable and this system lasted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Rules on maritime tax, which was an action of taxation on the use of sea before the proclamation of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the state code, can be seen in the 『Annals of the Dynasty of Joseon』. There is an article regarding the use of the sea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time.

The state agency in charge of fish traps, woods, and waters has two senior third-rank superintendents, two junior third-grade intendants, two junior fourth-grade deputy directors, two record keepers, one junior sixth-grade record keeper, and two junior seventh-grade managers. Investigators are dispatched to respective provinces: Shin I-chung to the U-do Island and the Punghae-do Island, Park Heon to Chungcheong-do Province, Choi Ho to Gyeongsang-do Province, Ko Hyu to Jeolla-do Province, to inspect the yield of salt ponds, salt fields, fish traps, and fishing grounds in seaside provinces to calculate taxes and create records. Finance Commission and special-duty inspecto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ent to respective provinces were mandated to investig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xes on salt fields that boiled sea water and baked sand, as well as the taxes on fish traps and boats.”

『Veritable Record of King Taejo』 stated about the state agency in charge of fish traps, woods, and waters. The agency succeeded a similar one from Goryeo Dynasty and it was created to manage affairs regarding fish traps, woods, and waters. It also handled the task of procuring fish, meat, salt, and fuel to be used at the royal palace.

As seen from 『Veritable Record of King Taejo』, in the sixth year of King Taejo, salt ponds, salt fields, fish traps, and fishing grounds in seaside provinces were inspected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level of taxes and to create records about them. In the seventh year of King Taejo, terms like salt tax and boat tax appeared in the annals in earnest.







There was 『Code of Administration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not officially enacted and proclaimed legally but became the foundation for enacting laws in early Joseon Dynasty period. 『Code of Administration of the Joseon Dynasty』 was written by Jeong Do-jeon in 1394, the third year of King Taejo's reign, and it shows rules on shared resources in early Joseon period, in its part about taxes on fish, salt, and boats.

『Code of Administration of the Joseon Dynasty』 consists of introduction and six codes. The introduction includes a general summary, country name, installation of the crown prince, genealogy, and edict, while the six codes are about personnel, taxation, rites, military affairs, justice, and public works for respective government ministries.

Among them, the code on taxation had rules on shared resources. Major rules in the code on taxation include an introduction, rules regarding provinces, land and family register, accountancy, agriculture and commerce, taxation, marine transport, salt, woods and water, gold/silver/metal/jade/copper/iron, taxes on factories and peddlers, taxes on boats, royal expenses, state expenses, military expenses, officials salaries, righteous granaries, public dispensary, exemption, and so on, and fishery-related taxation here are the taxes on salt, fishing grounds, and boats.

First, let us examine fishery-related articles included in the introduction of the taxation code of 『Code of Administration of the Joseon Dynasty』. This shows the position of fisheries in the society back then, as an object of taxation.

"Provinces and land and family register are the yield of wealth; accountancy is the control of wealth; agriculture and commerce is the foundation of wealth; taxation is contribution of wealth; marine transport is transportation of wealth; salt, iron, wood fields, fishing grounds, taxes on factories, commerce and boats are supplementary; royal expenses, state expenses, officials'salaries, military expenses, righteous granaries, and public dispensary are the use of wealth; and exemption is the relieving of wealth."





The article calls agriculture and commerce the “foundation of wealth” and salt, iron, woods and fields, and fishing grounds “supplement to wealth”. It suggests that fishery-related taxation in the early Joseon period was a supplementary financial source rather than a primary national finance source.

Plus, rules on woods, fields, and fishing grounds in the taxation code of 『Code of Administration of the Joseon Dynasty』 includes more detailed contents about the use of shared resources. Let us look into this.

“In the past, putting fine nets in lakes was prohibited and it was only after leaves fall off trees when getting in the woods with axes was allowed. This was for saving the profits from nature and for loving and nurturing it. This is the very foundation for using the woods, fields, and fishing grounds. In the prior dynasty, woods, fields, and fishing grounds were all occupied by those with power and ordinary households could not enjoy those profits. His Highness corrected wrong systems of the prior dynasty, confiscated woods, fields, and fishing grounds, and made them of use for ordinary households. Woods and fields are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ate of Works, to collect lumber from there for building and repair, while fishing grounds are under the charge of the Directorate of Fish·Meat·Salt·Fuel that collects fishes from there to supply them for people’s meals, ancestral rites, and guest reception. All the known woods, fields, and fishing grounds are written down”『Code of Administration of the Joseon Dynasty』 Taxation Code, Woods, Fields, and Fishing Grounds

“This country is adjacent to the ocean so many profits are produced from fish and salt, and public and commercial transport are concentrated on the rivers in the east and west. That is why the Directorate of Transport was established to take charge and taxes are imposed on boats to support the national finance, which is also quite a profit”『Code of Administration of the Joseon Dynasty』 Taxation Code, boat tax





The article includes a restriction on excessive use that might harm the renewal of shared resources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for the use of woods, fields, and fishing grounds, which goes “banning fine-mesh nets, allowing people to go into forests only after all the leaves fall off trees”. Plus, it also shows the fact that forests and fishing grounds that had been occupied by people with power during the Goryeo Dynasty era became available for all the people, as they became available for the use of ordinary households, that is, shared resources in early Joseon period. The principle of “sharing with the people” regarding shared resources back then can be seen again in this.

The use of forests and fishing grounds were under the Directorate of Fish·Meat·Salt·Fuel and the agency identified and managed their locations. This agrees with the records of 『Annals of the Dynasty of Joseon』 explained before. However, as 『Code of Administration of the Joseon Dynasty』 was not an official code proclaimed by the king, that was not legally effective.

Fishing weirs and salt ponds in different provinces are graded and recorded in registries which are kept in respective agency, province, and county. Those who leave them out of registry are punished with 80 floggings and the profits are confiscated by the government. The same punishment is applied to those who privately occupy fishing weirs. Fishing weirs are granted to the poor and are changed in every three years”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Finance Code, fish and salt

Joseon Dynasty's first official and legal code on people's use of the sea was in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in 1460. Rules on mountains, forests, rivers, and lakes can be seen in its Finance Code, in articles about fishes and salt. Those provisions briefly state, “Fishing weirs and salt in all provinces are recorded in the registry, which means, salt ponds are graded and specified in the registry to be kept in the Board of Taxation and respective provinces, and fishing weirs are granted to the poor for maximum three years”.





The maritime tax provisions in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were abstract and perfunctory. As they lacked concreteness regarding the tax rate and the target of imposition, they are insufficient historical materials for understanding general status of maritime tax at that time.

This also means that there were no clearly defined rules on the scale, target, and method of maritime tax imposition in the form of a state system, until the proclamation of 『Supplementary Grand Code』 in 1746. This is thought to be the reason for the development of diverse maritime taxation rules in different regions in late Joseon period, which is one of the topics of this lecture to be covered later on.

The concreteness especially lacks in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in comparison to 『Code of Administration of the Joseon Dynasty』 that divided between commercial tax and boat tax. As shown in the following article, regarding transport,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did not mention taxation on boats, other than commercial taxation on maritime merchants. Statements about maritime tax were limited to grading Japanese fishing boats into large, medium, and small size and defining fishing fees for them based on the size.

“Travel permits are issued to peddlers and tax is imposed on them. Eight sheets of paper money for overland peddlers, 100 for large ships, 50 for medium-sized ships, and 30 for small ships as for maritime merchants. “200 fishes are taxed for large Japanese ships that catch fish in the seas of the Ko-do Island and Cho-do Island, 150 for medium-sized ships, and 100 for small ships and exchanged with a cloth.”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Finance Code, sundry taxes

One of the reasons why early Joseon's taxation system on fisheries was only perfunctory was because fisheries were less important than agriculture as the source of tax. Fishery products are rather subsidiary foods than a staple diet, and their temporary large yield does not lead to accumulation of foods or go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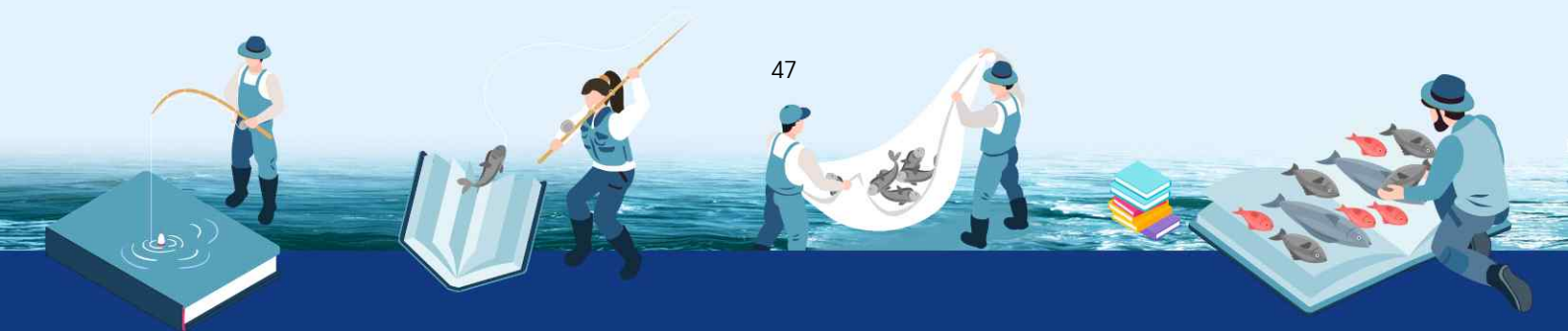
As fishery products start to decay immediately after catch, for them to maintain the value as products, certain technological condition such as refrigerating technology had to follow to maintain their freshness. In other words, the value of fishery products as merchandise is materialized when they can be combined with swift distribution and storage system.

This seems to be why the value of fisheries as an object of taxation was lower than that of agriculture that produced staple grains back then. In short, the dynasty had smaller incentive to have fisheries as the source of tax,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ir production, high cost of storage and processing, difficulty in their commercial use, etc. It seems to be reasonable and natural for rulers to subordinate fisheries to agriculture as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wide taxation system.

“Second State Councilor Ha Yoon presented several items for elimination of public harms... (omitted)... In some cases, people are summoned to build boats and taxes are imposed, and fishing weirs are made to collect fishing fees, or coals are buried to collect coal fees... (omitted)... Please strictly punish those who have the profits from fishing weirs to themselves and exclude others from them. volunteer obtain fishing fees, designate one-tenth of them as tax, make all of them be reported to the governor and receive the tax as for the figures.”

“Please designate three officials per fishing weir as treasurers to write down the quantity of fish catch and register it on the province’s ledger, while compiling and calculating fishery products in fall by Office of Embankment Works for their exchange with cotton cloth, two-thirds of which are granted to the one who built the fishing weir and one-third of which is offered to the Office of Currency Management.

The exact execution method of the maritime tax system before the launch of the Equalized Tax Law can be understood from 『Annals of the Dynasty of Joseon』 rather than from laws. First, 『Veritable Records of King Taejong』 mentions maritime tax, “Please also let people who volunteer obtain fishing fees, designate one-tenth of them as tax, make all of them be reported to the governor and receive the tax as for the figures.”





There is an article in 『Veritable Records of King Seongjong』, which proposes to make it one-third of the tax on fishing weirs. As in the case of land, maritime tax was imposed on the yield of regularly-installed fishing weirs whose yield was relatively consistent, in proportional taxation. However, the tax rate was not unified nationwide but varied by one-third, one-tenth, etc., which still needed to be resolved until the enforcement of the Equalized Tax Act when the nationwide maritime tax was defined.

For a central government to establish taxation system including fixed-amount tax and proportional tax, the output should be identified first for the prediction of tax revenue. However, as information on fishery output was entirely dependent on the honesty of fishermen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was practically im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obtain the information thoroughly. Jeong Yak-yong pointed out in 『Design for Good Government』 in the 19<sup>th</sup> century that fishery output might be manipulated by fishers.

“When I was living in exile in a seaside town, I went directly to a fishing trap by a boat with a young man and tried to buy a big fish, but the fish trader was reluctant and played a trick with the boatman, so I could catch only small fishes even though I directly watched fishing pots. I came back feeling bad and told the story to the village people and they said laughing, “Fishers play magic of hiding fishes and you would never be able to know how it is even if you’re with them on their boat.” 『Design for Good Government』, Office of Equal Service Lawbook, fish tax

As mentioned already, uncertainty in the fishery yield was much larger than that of yield from land. That is why it was very difficult to establish a uniform taxation system nationwide, so depending on customs and precedents that had been implemented based on fishery catch information accumulated from the past seems to have been a more reasonable choice than establishing a uniform system nationwide.

That was instead a result of mutual agreement between local government offices and fishers based on the fertility of fishery resources and the size of catch per region and season than a top-down policy.





In this lesson, we have checked on the fishery-related taxation system of Joseon Dynasty recorded in 『Code of Administration of the Joseon Dynasty』,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and 『Annals of the Dynasty of Joseon』. Next time, we will examine the fishery-related taxation system of Joseon recorded in 『Supplementary Grand Code』.





1-3

**Fishery-related taxation system of Joseon period  
: 『Supplementary Grand Code』**

Last time, I explained Joseon Dynasty's fishery-related taxation system recorded in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This time, we will examine Joseon's fishery-related taxation system in 『Supplementary Grand Code』.

It was in 1746 when maritime tax was stipulated in Joseon Dynasty's law book in earnest in 『Supplementary Grand Code』. Articles about fishes and salt in the Finance Code of 『Supplementary Grand Code』 had provisions on fishing boats and fishing weirs. However, as the Equalized Tax Law that had more detailed regulations of maritime tax was enacted in 1750, relatively few studies have dealt with legal provisions on maritime tax in 『Supplementary Grand Code』.

As you can see in this table, the amount of tax was defined by the size—large, medium, small—of the means of production, boats. Even though national regulations were applied for the tax on fishing boats, the rules for Jeolla-do Province and Gangwon-do Province were separately defined.

As for fishing weirs, only Jeolla-do Province was mentioned there and it is unclear whether it had become a nationwide norm. 『Supplementary Grand Code』 was proclaimed when the Equalized Tax Law was under discussion and its part about maritime tax can be seen as transitional.

There is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full-fledged studies about 『Supplementary Grand Code』, as most pas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Equalized Tax Law. However, as 『Supplementary Grand Code』 offered various clues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Equalized Tax Law in its transitional form, it included very important content that shows the status of the fisheries then.







Jeolla-do Province's taxes on fishing weirs were categorized into large, medium, and small sizes; the annual tax amount was 300 fish for large ones, 150 fish for medium-sized ones, and 75 fish for small fishes. In addition, 25 fish could be exchanged with one roll of cotton cloth for the tax payment. The amount of tax paid in the form of cotton cloth was 12 rolls for large fishing weirs, six for medium-sized ones, and three for small ones.

The tax on fishing boats were a nationwide regulation, but Jeolla-do Province and Gangwon-do Province were exceptions. Like fishing weirs, the tax on fishing boats were imposed in three categories—large, medium, and small sizes of boats; the tax amount for large boats was three rolls of cotton cloth for large boats, two rolls for medium-sized boats, one roll for small boats, and 0.5 rolls for very small boats. Notably, in Gangwon-do Province, 20 fish were imposed for full-boat catches and 10 fish for half-load catches in case the tax was paid with cod fishes. When the tax was to be paid in cloth, the tax amount was two rolls of cloth for full-boat catches and one roll for half-boat catches.

Now let us estimate the level of maritime tax. According to a book about late Joseon's national finance and military system, 『Book on the Financial and Military Matters of Late Joseon(萬機要覽)』in its part about money-making methods, one roll of cloth could be converted to two brass coins, while the maritime tax imposed on large fishing weirs in Jeolla-do Province could be converted this way: "300 Chinese herrings=12 rolls of cotton cloth=24 brass coins and in the same manner, 12 brass coins were imposed on medium-sized fishing weirs and three brass coins for small weirs. This shows that the tax amount for large fishing weirs in Jeolla-do Province was the same as the maritime tax regulation on four large fishing boats stated in 『Supplementary Grand Code』.

Larger amount of tax was imposed on large fishing weirs than on fishing boats, which shows the fact that the consistency in production with smaller uncertainty and guarantee of certain amount of yield was reflected in the definition of tax rate then. In other words, such taxation scale shows that the productivity levels of the fishery industry based on fishing weirs in late Joseon period was high.





『Supplementary Grand Code』 also included important information other than the taxation system for fishes and salt tax. It also included legal regulations on the use of the sea, regarding the object of taxation, method of taxation, and prohibition of heavy tax. The following is an article about fishes and salt in 『Supplementary Grand Code』.

“In case there is a damage or loss in fishing weirs, fishing boats, salt ponds, or certain defined values managed by the Board of Taxation, local government officials from any of the headquarters of the provincial governor, provincial military commander’s headquarters, regional naval headquarters, and provincial naval headquarters shall approve cancellation of decisions, and in case there is a wrong practice of imposing the shortfall to other family members, the government official in question is sentenced to flogging by the government of the province.

For land granted to public officials as stipend, each province’s regional residents’ tax is imposed and all fish taxes are exempted. As boats used for transporting of salted fishes are useful for defense of Jeolla-do Province and Gyeongsang-do Province, taxes are not imposed on them. Those who illegally infringe upon fish and salt taxes or impose double or triple taxation are held accountable for their crime. The boundary is set for the land and water granted to private persons by driving in stakes, tax is imposed on only one land and water, not in an overlapping manner with others. Custodial staff, accountants, and local officials who violate such rules are sentenced to 100 floggings and expelled, and public officials who violate the rule are held accountable and dismissed.” 『Supplementary Grand Code』 Fish and salt provisions

As seen in this article, 『Supplementary Grand Code』 was more improved than the previous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in that it had provisions regarding loss and heavy taxation. The Code prohibited harmful effects from imposing a tax on lost fishing grounds by allowing a shortfall of tax amount in case fishing grounds including fishing weirs, fishing boats, or salt ponds were damaged and lost du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 in different regions while being managed by the Board of Taxation. There was an exceptional rule of not imposing taxes on fish-salting men’s boats, recognizing they were important resources useful for defense.





For your reference, fish-salting men were commoners who were fulfilling personal labor service requirements by collecting fishery products in the sea or transporting salted fish to the palace. Most of them were based in the Jeju-do Island and in charge of transporting tribute products.

However, fish-salting men's boats were defined to be used for defense in Gyeongsang-do Province and Jeolla-do Province in 『Supplementary Grand Code』. That was an acknowledgment of tax exemption for those who were fulfilling personal labor service requirements by transporting tribute products and playing the role of naval forces. Such tax exemption rule was succeeded in the boat tax in the Equalized Tax Law to be explained next.

In short, the maritime tax that had been mentioned in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before was legalized in earnest in 『Supplementary Grand Code』. This reflected keen interests surrounding the sea back then, because of overlapping taxation agents from royal relatives and government offices that began to privately occupy the sea, and the legal provisions clearly show the transitional process of legally organizing and elaborating the taxation on the sea.

This time, we have examined Joseon's fishery-related taxation system in 『Supplementary Grand Code』. Next time, we will examine Joseon's fishery-related taxation system recorded in the Equalized Tax Law.





1-4

**Fishery-Related Taxation System of Joseon Period  
: Equalized Tax Law**

Last time, we looked into Joseon's fishery-related taxation system in 『Supplementary Grand Code』. This time, I will explain the Equalized Tax Law, a revolutionary fishery taxation policy which transferred maritime tax from the area of sundry taxes to a major financial source for the central government.

The Equalized Tax Law was King Yeongjo's policy for the reform of commoner service in the 18<sup>th</sup> century. The policy included the action of reducing the amount of military cloth tax from two rolls per non-disabled male a year to one roll and of supplementing the shortfall with new tax sources such as grain surtax rice, cloth tax from select military officers, maritime tax, etc.

For your information, the grain surtax rice was an action of taxation on land that was arable but untaxed because it was omitted in land registers and the military cloth tax was an action of incorporating commoners serving as select military officers into the military duty system, to impose military cloth tax on them. Lastly, maritime tax was an action of inspecting the tax on fishes, salt, and boats that had been categorized as sundry taxed before and incorporating it under the control of the Office of Equal Service.

Early studies on the Equalized Tax Law mostly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Equalized Tax Law and its success as a reformatory action, that is, a positive or negative evaluation of the law in terms of whether there was a permanent tax revenue increase for the newly-created tax items, as well as whether the tax revenues imposed to fill the shortfall actually resulted in alleviation of commoners' service.







Recently, researchers suggest that in-depth studies on respective tax items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substantial historical materials, to re-evaluate the Equalized Tax Law. This new perspective highlights that approach to the reality should be prioritized for a proper historical evaluation of the Equalized Tax Law.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Equalized Tax Law, but few reviewed maritime tax from the viewpoint of institutional history in a thorough manner.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maritime tax not focusing on the action of reforming commoners' service, the Equalized Tax Law had a meaning even more significant than a nationwide legal provision on Joseon Dynasty's fishery-related tax system. That is why we need to more thoroughly examine changes in the fishery ownership that derived from the enforcement of the Equalized Tax Law.

In this lesson, I will explain what influence the Equalized Tax Law exerted on the fishery ownership system, focusing on the fish, salt, and boat tax which was one of the tax revenues imposed to fill the shortfall of alleviated taxes through the Equalized Tax Law. Private occupancy of the sea by royal relatives and government offices had to be repealed first to secure tax revenues, as the Equalized Tax Law is interpreted to have gone beyond a reform of commoners' service and encompassed the issue of a private occupancy of the sea in the scope of reform. This lecture focuses on the re-evaluation of such a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aritime tax system's establishment.

Major provisions regarding maritime tax in the Equalized Tax Law followed 「Office of Equal Service Lawbook」 and they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able. Regionally, the maritime tax stipulated by the Equalized Tax Law encompassed all across the state including Chungcheong-do Province, Gyeonggi-do Province, Jeolla-do Province, Gyeongsang-do Province, Hwanghae-do Province, and Pyeongan-do Province. The principle of its imposition followed general common rules applied to the entire state and regional special rules.





General rules can be largely categorized into taxes on fixed fishing gears installed on the sea, fishing grounds, and fishing boats. Such categorization of the object of taxation had also existed before the maritime tax system under the Equalized Tax Law, which can be seen from 『Supplementary Grand Code』we have seen so far. However, 『Supplementary Grand Code』 was different from the maritime tax system under the Equalized Tax Law in that it was not a nationwide code.

The common taxation method for the maritime tax under the Equalized Tax Law was to grade fishing weirs, net fishing, net casting, fishing gears, fishing boats, etc. by region and to set the tax amount according to the grades. To help your understanding, I will explain by using fishery-related terms contained in the fish tax part of 『Design for Good Government』 and the Equal Service Office Lawbook.

For a fishing weir, bamboo fences are fixed following fish ways and a trap is installed with fish pots, to catch fishes. Net fishing is a method of stopping a boat above the migration route of fishes and casting a net there to catch fishes. It is a net fishing above fishes' migration route.

Net casting is a way of fishing by installing nets from big or small boats following watercourse in the middle of the ocean where different fish species are gathered. Lastly, fishing place is a method of fishing at a spot on the sea where underwater topography enables easy fishing, in which fishes are caught by small boats surrounding a large one. It is called fishing place as topography is utilized for fishing.

As seen from the table, grades given to fishing weirs, net fishing, net casting, fishing place, and fishing boats, as well as the amount of taxes imposed on them are different per region. The tax amount for fishing weirs was 3-40 brass coins for Chungcheong-do Province, 1-3 brass coins for Jeolla-do Province, 2-20 brass coins for Hwanghae-do Province, and 2-15 brass coins for Pyeongan-do Province, the smallest for Jeolla-do Province and the largest for Chungcheong-do Province. Plus, the largest amount of tax was 40-250 brass coins for herring weirs in Hwanghae-do Province.





There were special regional rules in the maritime tax system under the Equalized Tax Law other than common rules. As demonstrated in the table, maritime tax was also imposed on fishing with fixed fishing gears that were developed follo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as of different regions, including straw nets, net devices, fishing screens, heated stones, etc. To help your understanding, fishery-related terms used in the fish tax part of the 『Design for Good Government』 and the Equal Service Office Lawbook will be explained.

Straw nets were used for fishing using the topography of the west sea, where such nets were spread at certain areas with a large tidal difference. Fishing using straw nets was known to be a fishing method whose efficiency was higher than that of fishing weirs.

The net device is fixed fishing net, but what it exactly has yet to be discovered. Fishing screen is a kind of fishing net used in a similar way to fishing weirs and it refers to a fishing gear that was developed and used mostly in the coastal waters of Gyeongsang-do Province. Heated stone was a kind of fishing gear similar to straw net and it began to be called wooden post net in late Joseon period.

Lastly, all the maritime taxes under the Equalized Tax Law were imposed in the form of brass coins. This was a reflection of a trend of tax payment in money under the Uniform Land Tax Law in the Equalized Tax Law. It is contrary to the imposition of fish and salt tax in rice, cloth, or other goods in 『Supplementary Grand Code』 proclaimed during King Yeongjo.

Maritime taxation methods were different and complex in respective regions because regional maritime tax system surveyed by officials dispatched by King Yeongjo to different regions were directly accommodated into the law. It seems that King Yeongjo accepted fish taxes that had already been enforced in different regions into the enforcement of the Equalized Tax Law, while taking actions such as combining a simplified form of some existing methods.





However, there was criticism over the lack of substantial equity, because no clear criteria were suggested for the application of regionally differentiated taxation methods. Dasan Jeong Yak-yong criticized the lack of equity and principle by saying, "Pyeongang-do Province was furtively excluded from boat tax and Gyeongsang-do Province was furtively excluded from salt tax, while the rate of fishing weir tax in Jeolla-do Province was also furtively removed" in his book 『Design for Good Government』.

In short, the maritime tax system under the Equalized Tax Law went through the process of tax revenue survey. First, however, the system needed to be completed, lacking uniform and specific criteria.

As shown in the table, the maritime tax system under the Equalized Tax Law included diverse and complex characteristic with different objects, methods, and amounts of taxation per region. Then, what did such taxation principle lacking in uniformity mean?

First, it seems that the maritime tax system under the Equalized Tax Law directly absorbed diverse fishery-related taxation systems scattered in different regions during Joseon Dynasty era. As demonstrated in many historical materials, nationwide surveys were conducted first before completion of the system. However, seen from the fact that nationally uniform rules were not applied for the system, the surveys seem to have been limited to just checking on the development of diverse fish tax systems in different regions.

Second, a uniform taxation system on fisheries failed to be accomplished despite the ground-breaking reformatory action. The reason may have been because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maritime tax system under the Equalized Tax Law was to repeal private occupancy of land and waters, as well as to secure tax revenues to fulfill the shortfall resulted from the changed system.







In short, King Yeongjo focused more on identifying tax revenues' leaking due to private occupancy by royal relatives and government offices and securing them as the financial source for the state rather than on fair taxation on the use of the sea, as shown by the following historical article.

"This state is surrounded by the sea on three sides and all the profits from fishes and salt are now privately occupied by some families, so King Sukjong had established a separate government office dedicated to dealing with the fish, salt, and boat tax but it have failed so far; only recently, an appeal to the court made Park Mun-soo, Kim Sang-jeok, and Lee Hu be dispatched to all the provinces including Gyeongsang-do Province, Gangwon-do Province, Hwanghae-do Province, Gyeong gi-do Province, Chungcheong-do Province, and Jeolla-do Province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and set the tax amounts. As Kim Sang-jeok died of a disease in Chungcheong-do Province, Hwang Jeong was dispatched instead of him to look around various counties and provincial officers took that charge in Gyeonggi-do Province, Pyeongan-do Province, and Hamgyeong-do Province. Then, the practice of fishing weirs and boats privately occupied by royal relatives was repealed to make tax imposition on them possible and eventually, there was King's order 'If such ill practice can really be abolished for the people, how can I reserve myself from it?', which was a truly unprecedented event." January 13, 1752 『Veritable Records of King Yeongjo』

Eventually, Joseon Dynasty enforced a provincial quota system for maritime tax, resulting in a new goal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stably secure necessary financial sources while leaving the tax collection to existing local tax payment practices.

Third, the maritime tax system different for respective regions was reflecting the current status of fisheries at that time. Let me compare the status of developing fisheries in different regions based on the records of regional collection of maritime taxes.





First, fishing by using straw nets was developing in Chungcheong-do Province. Straw nets were used for fishing by using the topography of the west sea, where such nets were spread at certain areas with a large tidal difference. In Jeolla-do Province, fishing weirs were not graded but a fixed tax at 20-40 brass coins was imposed on them. This is estimated to have been the fishing fee to enter the yellow corbina fishing ground developing in the west sea including a floating fish market in Yeonggwang-gun county.

To look into other materials, in the 『Records of the Border Defense Council』, finance minister Lee Shi-bang was saying that 1-dong of tax should be collected not only from royal relatives or government offices but also boats that get tax from floating markets to be paid to the Finance Minister, based on an appeal submitted by an inspector of Jeolla-do Province. Here, the unit called 'dong' referred to 1,000 yellow corbinas or 2,000 herrings.

In addition, in 『Diary of the Royal Secretariat』, fishermen were asking for reduction of all of the unloading tax and fishing weir tax controlled by higher government offices, royal relatives, and lower government offices, as well as the tax on floating fish markets controlled by the Finance Ministry. In other words, tax was being imposed on fishing grounds, in the form of fishing fee imposed on the use and acquisition of resources from rich fishing grounds in certain waters where migratory fishes.

In short, fixed-amount taxation was developing in regions where stable fish catch was empirically guaranteed in the waters with long-existing migratory fish stocks, such as the areas of floating fish markets.

In Gyeongsang-do Province, fishing screens were used as stationary fishing gears. Plus, fishery industry of catching fishes with strong mobility relatively far out at sea. Taxation was imposed on various objects diversified into herring fishing ground, octopus fishing ground, river fish ground, offshore net casting, ocean fishery, etc., and the taxes were collected in two methods: proportional and fixed-amount tax. Notably, the method of taxation on octopus and river fish grounds was defined as proportional tax, in which a certain proportion in a catch was paid as tax.





For your information, the following article shows the process of how the one-fifth taxation rule in the fish tax part in the part about the Equal Service Office Lawbook in 『Design for Good Government』.

“According to ordinances from the past, Gijang District imposed one-fifth of catch as tax on cods or herrings from fishing grounds or fishing weirs; Dongrae Prefecture, one-eighth; and Regional Naval Headquarters, one-third: as the tax amount was not even, the half-way value at one-fifth of tax shall be applied. According to past ordinances regarding river fishing grounds in Changwon, taxes were imposed on all the fishes caught but there had been no defined tax amount, but now the tax rate has been defined at one-fifth.” 『Design for Good Government』, part of Equal Service Office Lawbook, Fish Tax

This shows that the maritime tax system under the Equalized Tax Law applied more simplified and unified criteria on tax rates, while inheriting the result of past tax revenue surveys.

In Gyeongsang-do Province region in the meantime, fixed-amount tax was imposed on offshore net casting and ocean fishery, in which fishes were caught far out at sea.

To explain the terms simply, 『Design for Good Government』 explained that “offshore fishing” is different from fishing in fishing grounds, which meant fishing on boats far out at sea without entering fishing grounds, waters, or net-fishing areas that imposed fishing fees during cod or herring seasons.

“Offshore” literally meant the middle of the ocean, an expanded fishing grounds concept. In addition, the offshore fish net that was a large sweep net was an action taken regarding the use of unoccupied things, but it was instead specifying fishing gears with high fishing efficiency.





The taxation on offshore net casting and ocean fishery included fishing boats that could catch fishes on the far sea and large fishing nets that could enclose and catch shoals of fishes based on the region of South Gyeongsang-do Province and this demonstrates the fact that such production methods and distribution organizations that could circulate large-scale catches of fish were developing together. As shown in the table, boat tax was not imposed separately on fishing boats, but was imposed differently for each size of boats in respective regions. This was not a uniform rule as well.

In short, the Equalized Tax Law in late Joseon period had a significant meaning for a nationwide establishment of the maritime tax system. As the maritime tax system under the Equalized Tax Law was established to supplement lacking tax revenues, it failed to establish a uniform criteria nationwide. However, the tax revenues different for respective regions demonstrate the fact that fishery-related taxation system in Joseon Dynasty was evolving to be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various fishing gears and techniques.

This first lecture examined fisheries industry and taxation system in the late Joseon period. We have understood the trend of changes in Joseon Dynasty's fishery-related taxation system demonstrated in various historical material including the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Supplementary Grand Code, and Equalized Tax Law.

In the next lecture, I will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the fishery industry in the late Joseon period, based on historical materials. This is the end of the first lecture.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1周

## 朝鲜后期水产业及其税制

1-1

### 讲义介绍

同学们好，我是担任《韩国渔业发展史》讲座的宋庆殷。  
这是第一讲，我们将探讨朝鲜后期的渔业和税收制度。

首先，我先介绍一下韩国渔业的发展史。  
本次讲座将从渔业法的形成过程的角度来着重介绍韩国水产业的发展。

韩国是一个三面环海的国家。

正如你所看到的，韩国由南向北呈细长状，被东面东海，西面西海，南面东中国海和大韩海峡所包围。

北隔鸭绿江和图们江与中国和俄罗斯接壤，南边有济州岛，东边有郁陵岛，包括约3962个岛屿。

韩国的东海是寒暖流交汇的“潮境水域”，溶解氧和营养盐类丰富，鱼类饵料充足，因此形成了所谓的黄金渔场。

在韩国这样的自然环境下，第一产业渔业在朝鲜时代以前就是重要的产业之一，特别是在韩国经济困难的南北韩战争前后，通过捕鱼活动捕获的鱼也是重要的外汇源。历史上渔业曾是支撑韩国经济重要的产业。

每个国家都有领土，海洋都有领海。

本讲义对于朝鲜后期到现代渔业法雏形建立的殖民地时期的领海，即沿岸渔场的国家管理基本体系“渔业法”为主题进行探讨。

特别是我们从经济学的观点对作为渔业捕捞资源的“水产资源”进行讨论，换句话说，讨论的主题是作为公共资源的渔产。

我们先来看看讲义的主要关键词渔业资源。





栖息在水域中，凡是对人类具有产业利用价值，并成为捕捞或者养殖的对象统称为水产生物。  
而渔业资源，即是指目前可以直接被人类利用的水产生物。

让我们更仔细的看一下渔业资源。

渔业资源是具有独特生物特征的可自我再生资源 and 作为经济财的公共资源的自然资源。

自然资源大致可以分为不可再生的可耗尽资源——非可再生资源，以及可更新的非可耗尽资源——可再生资源。

非可再生资源是可耗尽资源，其重要特征是由于禀赋有限，会因使用而枯竭。

金、银、煤、石油等矿产资源是典型的可耗尽资源。

另一方面，非可耗尽资源是无论人类努力与否都会自行补充或更新的资源。

例如阳光、空气、鱼类、森林是通过自然循环不断得到补充和更新的代表性非耗尽性资源，即可再生资源。

这些可再生资源又分为自律更新资源和非自律更新资源。

此处，区分自律更新和非自律更新的标准是是否因人类的使用频率而影响其存在量，而其存在量的变化是否会影响其再生。

无论人类如何使用，非自律更新资源总是会得到补充。

换句话说，它的特点是更新率恒定，代表性资源是阳光、空气和降雨等。

非自律更新资源不具有作为商品的经济价值，具有非排他性和非竞争性的公共物品的特征。

非排他性是不能排除他人消费的一种物品的特性，非竞争性是指即使几个人一起使用也没有竞争。

相反，自律更新资源与非自律更新的区别在于，由于自律更新资源是自我补充的，未来资源量会根据人类的使用而变化。

哈丁所指出的“公地悲剧”即是由于自律更新资源以高于更新率的速度被过度使用时，资源最终会枯竭的代表性概念。

自律更新资源包括森林、草地、鱼类、水质、野生动物等，作为物资具有公共资源的特征。

水产资源是公共资源。

公共资源具有非排他性和竞争性的特点。





非排他性是指，虽然排除其他人并非不可能，但是要做到这一点，在技术方面必须承担相当大的成本支出。

在经济方面，具有这一特征的财物比起由特定的人拥有，由全体成员共享的话效率更高。  
这也是公共物品的典型特征。

但是区分公共物品与非公共物品的最重要的一点是，个人消费会影响全体成员的消费。  
这被称为竞争性，一般也是私有财产的特征。

作为参考，私有财产是兼具排斥性和竞争性的财物，所以很容易排除掉没有对代价进行支付的人，具有如果一个人进行了消费，其他人就不能消费的特征。

一般来说，在公共资源的环境或资源经济学的讨论中，“枯竭”是讨论的出发点和核心议题。

公共资源的所有权体制研究的开端，即是经济学确认公共资源是重要商品的时期。

也就是说，随着人类社会出现资源枯竭、污染等环境相关的社会经济问题，这就成为制约人类经济活动的因素，因此经济学界也开始注意到公共资源的重要性。

公共资源管理的主流观点侧重于财物使用者在使用财物上的竞争加剧，当发生冲突时，缺乏合理的制度机制或解决措施，就会导致哈丁所说的“公地悲剧”。

哈丁提出解决公地悲剧的方法，即将公共资私有化或者由中央政府进行统制，大体上基于此的分析框架和管理制度被许多国家沿用至今。

下面我们详细了解一下公共资源相关研究的发展情况。

以早期新古典主义学派为基础的主流经济学将公共资源研究分成两个分支。

一种是彻底把产权交给市场的市场至上主义，另一种是基于成本效益分析的基于物质均衡来解决环境问题的立场。尤其是后者，选择采取政府干涉资源管理的方式。

而且，最近的公共资源研究发展路径在新古典主义基础上不仅加入了生物学的视角，除了单纯的成本便利外，还重视经济活动和环境之间相互依存的关系，正在向生物经济学（Bioeconomics）演化。

生物经济学与主流经济学的主要区别在于，它不将生态系统视为独立的要素，而是认为它们与社会经济体系共同演进，相互影响。







生物经济学强调，鱼类、地下水等自律更新资源的特征是未来的资源量与现在的资源量无关，强调与现在的使用量之间相关的关系。

因此，生物经济学主要考虑未来资源量随人类使用量变化而变化的自律更新资源，并着眼于根据其特点来预测资源量和进行资源管理。

总之，从“公地悲剧”开始，延续到“生物经济学”的对公共资源利用的相关经济学讨论，正在朝着推进适度资源消耗量的测定方式优化的方向发展，以便可持续利用资源。

但也有人指出，在这种论点下，公共资源管理政策的制定和实施主体仍然是政府，政府层面的制度管理效率仍然是关注的焦点。

因此，最近的研究方向是关于公共资源的利用和管理，证明以地区为中心的自治管理效率的经济学讨论备受瞩目。

奥斯特罗姆 (E.Ostrom)提出了以共同体为中心的自治制度，作为能够避免“公地悲剧”的解决方案。

众所周知，奥斯特罗姆以同一主题获得了2009年的诺贝尔经济学奖。

关于公共资源的支配体系，她跳出了以市场和国家作为区分的古典经济学视角，深入挖掘了以地方共同社区的成员协议下合作管理公共资源的案例，并强调其效率性。

她主张为了有效管理公共资源，国家管理的公共制度和公共体管理的私有制度以相互依存的方式协作，通过这种方式实现资源的可持续利用。

奥斯特罗姆的论述的基础是多种传统公共社区流传下来的自然资源管理方式的案例研究。

这是因为这种利用自然的经验去掌握知识的所有共同体所有制方式从生态学的角度来看，更能反映自然资源的特征。

像这样，最近对公共资源的共同体管理主体的研究变得活跃。其核心是公共资源的内在特征是人类试图有效解决“竞争性使用”“资源枯竭”的问题。

特别是奥斯特罗姆通过分析多种公共资源使用的案例，概括了八种长期持续进行资源管理的一般化法则。

第一，存在明确界定的合法用户和资源边界





- 第二, 资源的使用和努力-费用相关规则必须是适合地方社会的状态
- 第三, 在规则的生成和修改上, 受规则影响的人应该能够参与到过程之中
- 第四, 对使用者的利用情况和资源量持续进行监测
- 第五, 对于反复违反规则的行为, 处罚要采用累进递增式
- 第六, 争端解决机制要迅速且低成本
- 第七, 本地使用者创建的规则是在法律上得到政府许可的, 不能被侵害的
- 第八, 公共资源的管理体系是一个多层次、整合的事业单位

特别是第一条规则, 即是否存在对合法用户和资源有明确的边界设定, 也具体暗含了公共财产所有权的归属。

例如, 如果没有对合法用户和资源有明确的边界设定, 公共资源如果可以自由准入, 就会造成过度消费, 从而枯竭的可能性大大提高。

从上述最近的研究成果来看, 可以肯定的是, 以不枯竭并可以持续利用的前提条件, 了解公共资源的所有制的历史变迁是一项非常重要的研究任务。

带着这样的问题意识, 本讲座的主题是回顾从朝鲜后期到殖民地时期作为渔业的公共资源的所有制形成的一系列历史过程。

我们已经看过了公共资源相关研究的发展趋势。我们将视线重回到讲座的主题。

朝鲜时代建立的海洋所有制作为一种官方制度是以何种形式发展而来, 其实质是什么?

这个问题的答案是第一讲的主题。

朝鲜时代直到末期, 公共资源都是归君主(王)所有, 但实际上对海洋的占有和利用, 同土地一样, 是登记和征收租税。

征税的标准是以渔船等渔业生产资料和渔箭、藿田等生产场所。

这是在全国范围内1750年均役法推行下的海税制度。

因此, 在第一讲中, 我们将观察朝鲜时代的海税制度, 朝鲜渔业所有制的建立, 以及该制度的历史意义。





另一方面，从广义上讲，所有的海洋和河流，即水系都是公共资源，但公共资源与所有财物和资源一样，其产出和价值都具有经济意义，这是因为并非所有的水系，海洋都是渔场。

要成为渔场，必须是有经济价值的有用水系动植物栖息或洄游的场所，必须是技术上可以捕捞和养殖有用动植物的场所，也必须是在经济上也可以进行水产动植物的捕捞和养殖的地方。

水系，即海洋中是否发生公共资源的竞争性使用，关系到该水系的资源量是否丰富，技术上也必须是可以捕捞的渔场。换句话说，和渔场的经济价值是相关的。

旧水系，即海洋的民间所有制与经济价值不无相关。

因此，第二周和第三周讲述的主题是通过实例和史料来阐明渔业资源的所有权体制能够优先发展的资源形态和利用方式，近代渔业权转型的历史过程，集中讨论两者间的衔接。

在韩国，与渔业有关的现代所有权制度是通过1908年的《渔业法》和1911年的《渔业令》引入的。

即使在现代，国家也授予渔业排他性权利，渔业权的制度体系可分为免許（许可证）、许可、申报等方式。

同《森林令》、《矿业令》一样，这是殖民地时期对自然资源引进现代所有权体系的一部分，

20世纪初期，通过《渔业法》和《渔业令》，引入了免許（许可证）、许可、申报的近代所有权制度，使得必须法律上取得渔业权才能够行使对渔场的权利。

而且这里虽然只是一部分，但包含了使用、收益、处分只局限于共同体而不是个人的法律限制，这创造了一种新的所有权实体。

其制度渊源是日本专门针对地先渔场使用专用渔业管理制度，将其经过缩减修改后使之适用于殖民地朝鲜。

正如先前奥斯特罗姆的研究所证实的那样，对于捕获水产资源的渔业来说，共同体所有制即使在现代也是防止公共资源枯竭的重要解决方案，这是讲座要讨论的第三个主题。

该内容将在第四周讲座中进行，我们将讨论在韩国近代免許渔业制度的实施过程中创建共同体所有制的一系列过程。

接下来第四次讲座的主题是20世纪初韩国《渔业法》和《渔业令》的整体实施情况。







许多前人研究都同意韩国1911年是根据《渔业令》建立近代渔业权制度，但是其中许多具体实际的细节尚未查明。

近代渔业权制度引进初期，渔业权发放的实际状态和情况是怎样的？

所有者实体是个人还是渔业共同体？

还是以少数人分享股份的形式？

正如既有的研究者们主张的那样，朝鲜后期传统渔业共同体是否发达？

他们如何吸收殖民地时期近代渔业权制度的变化？

他们拥有的渔业权种类如何？渔业共同体果真存在吗？

作为答案，在第五周的讲座中，以殖民地时期形成的渔业权制度为主体，以《官报》中记载的渔业权报道为基础，计算了渔业权的统计数据，按渔业种类，渔业权所有主体分类考察它的实际情况。

总之，这次课程的目标是从以下三个角度理解在韩国作为公共资财的水产资源的所有权的形成和近代法制化的一系列过程。

首先，从制度层面看，作为公共资财的渔业权在朝鲜时代是如何进行管理的，经过韩末和殖民地时期，旧式的渔业权向现代渔业法形态的过渡过程是怎样的；

第二，近代渔业权如何适用于现实，相应的朝鲜的传统渔业秩序发生了怎样的变化；

第三，从渔业权统计中掌握当时殖民地时期的渔业现状，包括渔业权的种类、获取、处置等等。

此外，我们认为将当前韩国渔业纳入讲座也是有意义的，因此在第六周讲座中我们将从GDP，产量，进出口等经济统计中考察渔业的意义。

具体来说，每周的讲座安排如下。

第一周是对朝鲜后期渔业和税制的考察，第二周是通过朝鲜后期史料掌握渔业的实际情况，第三周是韩末渔场的实际使用情况，第四周是随着近代渔业法的形成和应用，韩国传统渔业秩序的变化，第五周是近代渔业法的引进和渔业所有权的归属变化，第六周是补论，主要内容是渔业的发展和韩国经济。

作为参考，此次韩国渔业发展史的讲义是基于我的博士论文《韩国近代渔业权的形成与法制化》，并用讲义的形式进行重构。







希望这六次讲义能够扩大大家对于韩国渔业发展过程的学术视野。

第一堂课的主题是朝鲜后期水产业和税收制度。

本讲义将利用朝鲜时期代表官方史料如《朝鲜王朝实录》、《备边司謄录》、《日省录》、《承政院日记》，法典如《朝鲜经国典》、《经国大典》、《续大典》、《均役厅事目》、《经世遗表》来观察朝鲜时期渔业的税制。

下一节我们将介绍第一讲主题：《经国大典》朝鲜时期渔业相关税收制度





## 1-2 朝鲜时期渔业相关税收制度:经国大典

上次我们从整体上介绍了韩国渔业发展史。  
这次要介绍的是朝鲜时代渔业相关的税制中《经国大典》的部分。

朝鲜王朝对山林、渔箭等山林川泽奉行“与民共之”的原则。  
高丽时代的山林川泽是私占的对象，但到了朝鲜时代，百姓可以在这些领域自由地从事生产活动。

这与朝鲜王朝初期确立的土地国有制不无关系。  
从朝鲜初期开始严格管控私田而实行的科田法是韩国历史上第一个全国性的国家土地制度。  
国田制的根源是“普天之下，莫非王土，率土之滨，莫非王臣”的王土思想。

朝鲜初期，王土的范围不仅包括土地，还包括山林川泽等公有资源，“与民共之”即利益也是与百姓共同所有的含义。

而且，“与民共之”的对象也包括海税。  
在朝鲜时期，海税是对于向利用海洋的百姓们征收的一种收税制度，被称为“鱼盐船藿税”。

第一产业为中心的前近代社会，土地是农业的重要资源。  
土地是生产粮食不可或缺的一种投入，而粮食是前近代时期最重要的商品。  
于是作为生产基础的“田”和“畜”土地国有制，成为国家直接征税的对象。

另一方面，海洋与土地不同，或以渔箭、盐盆、藿田等，即从事生产的特定水域作为征税对象，或在不易确定范围的水域以船舶、渔网作为收租对象，这种状况一直持续到朝鲜末期。

朝鲜王朝的国制《经国大典》颁布之前关于海洋的征税举措（海税），可参考《朝鲜王朝实录》。  
下面是朝鲜王朝初期有关海洋利用的纪录。





“司宰监:掌渔梁、山泽之事。判事二,正三品;监二,从三品;少监二,从四品;注簿二、兼注簿一,从六品;直长二,从七品。分遣监察于各道。慎以表右道丰海道,朴轩忠清道,崔滈庆尚道,高休全罗道,踏验沿海州郡盐盆、盐区、鱼梁、水梁,量所出多少,定其税成籍。命三司,同各道敬差官,点煮海燔沙盐税多少及鱼梁船税多少。”

据《太祖实录》记载,鱼梁和山泽由司宰监掌管。

司宰监是朝鲜时代官厅作为继承高丽时代司宰寺的业务部门,是为掌管渔梁和山泽相关业务而设立的官衙。

而且司宰监的业务还包括采购官中所使用的鱼、肉、盐、燃料。

正如《太祖实录》中所记载,太祖六年考察了沿海州郡的盐分、盐区、鱼梁、水梁,计算所出多寡,并制定了相应的税额。

太祖七年,盐税、船税等用语才开始正式出现在实录之中。

除此之外,虽然不是正式经过制定或传播的法律,但我们一起来看一下朝鲜早期法律制定的基础《朝鲜经国典》。

《朝鲜经国典》是太祖三年即1394年郑道传制定的法典,通过这份材料中的渔盐船税的部分,我们可以确认朝鲜王朝初期对公共资源的规定。

《朝鲜经国典》由绪论和六典部分组成。

绪论中收录了包含管理国家要旨的正宝位、国号、定国本、世系、教书等,六典中根据管辖业务收录了治典、赋典、礼典、政典、宪典、工典。

其中,有关共享资源的规定可以在赋典中找到。

赋典的主要规定包括总序、州郡、版籍、经理、农桑、赋税、漕运、盐法、山场水梁、金银珠玉铜铁、贡商税、船税、上贡、国用、军资、俸禄、义仓、惠民典药局、蠲免等,此处与渔业相关的赋税是盐税、水梁税和船税。

首先,我们先来看下《朝鲜经国典》中赋典收录的渔业相关叙述。由此可以推测当时税赋中渔业的地







州郡·版籍是财富的产出，经理是财富的统制，农桑是财富的根本，赋税是财富的捐献，漕运是财富的运输，盐、铁、山场、水梁、工匠税、商税、船税是辅助，上供、国用、俸禄、军资、义仓、惠民药局是财富的使用，蠲免是财富的缓解。

文章称，农桑是“财富的根本”，盐、铁、山场、水梁等是“财富的辅助”。

朝鲜初期，与渔业有关的税收似乎不是国家财政的主要来源，而是一种作为辅助财源的地位。

此外，《朝鲜经国典》的赋典，山场水梁中收录了更多对公共资源的利用的详细事项。我们来看一下内容。

从前，不许把密密麻麻的织网放进池塘里，草木的叶子都掉光了，才提着斧头进山。这就是热爱、珍惜大自然的恩惠。这是利用山场和水梁的根本。前朝时期，山场和水梁都被豪强所掠夺，公家并没有得到什么好处。殿下即位后，即改正前朝的错误，将山场和水梁没收作为公家所用。山场隶属于缮工监，采集的木材用于营缮，水梁隶属于司宰监，采集的鱼类供内外菜肴和祭祀及招待宾客之用。山场和水梁的所在地都被记录下来。《朝鲜经国典》赋典，山场水梁

“韩国因为靠近大海，不止鱼盐的好处很多，公和私的漕运也在东西江上接连不断。因此，设立司水监负责这项工作，征收船税，用于补贴国家财政，其利益也不小。《朝鲜经国典》赋典，船税

该文对于利用山场和水梁的根本原则“严禁织网过密，要让草木落叶后再入山”等包含了对于可能危害到公共资源更新的过度使用行为进行规范的内容。

同时可以看出，高丽时期被豪强掠夺的山林水梁，在朝鲜王朝被公家所用，即作为公有财产，让所有人民都共享。

这里再次确认了当时作为共有资源，其“与民共之”的原则。

另外，山林和水梁的使用由司宰监管辖，其所在也是同一官厅进行确认，并进行管理。

这也与前面提到的《朝鲜王朝实录》的纪录相一致。但是，《朝鲜经国典》并不是君主宣布的正式规定，因此存在在法律上不具有效力的局限性。







多个道的鱼箭·盐盆等被分级并制成帐籍纪录在册，保管在本曹、本道和本邑。若帐籍中有所遗漏，处以杖八十，利益充公。私占鱼箭者的处置也相同。鱼箭交于贫民，三年后更换。《经国大典》户典，鱼盐

朝鲜王朝在法律上阐明了人民使用海洋的最早正式规定是1460年的《经国大典》。

关于山林川泽的规定在户典，鱼盐条中可以确认。

简而言之，规定“各道的鱼箭和盐盆分成等级，记入册籍，即盐盆按等级区分，记入账簿，户曹和相关都邑备置，以三年为期限将鱼箭支付给贫民。”

《经国大典》的海税相关内容是观念性的、形式上的。

特别是缺乏对于税率和征收对象的具体性，因此这份资料不足以掌握当时与海税相关的各种情况。

这也意味着，直到1746年颁布《续大典》，海税的规模、对象和收税方式作为国制并没有明确的规定。

我认为这是之后讲座内容中提到朝鲜后期海税相关的收税规定，在各地区多样发展的原因。

特别是，《经国大典》与区分了商税和船税的《朝鲜经国典》相比，其具体性也不尽人意。

正如下文所证实的那样，《经国大典》中和漕运相关的水商，即除了向海商征税外，没有提及对渔船的收税。

海税的提及也只是根据倭船的大小，分为大、中、小，并以此为基础制定捕鱼费。

向行商发放路引并进行收税。陆商每月楮货（朝鲜纸币）8张，水商大船100张，中船50张，小船30张，在孤岛、草岛捕鱼的倭船需要收税，大船收鱼200条，中船收鱼150条，小船收鱼100条。换成布交付。《经国大典》，户典，杂税

朝鲜初期的渔业税制之所以流于形式，可以说是因为渔业作为税源不如农业重要。

水产品作为食粮，与其说是主食，不如说是副食，即使暂时产量高，也很难以食粮或者财货的形式实现积累。





由于捕捞后不久，水产品就会腐败变质，因此，要保持水产品的商品价值，就必须同时具备保鲜的技术条件，即冷藏技术，也就是说，水产品只有实现快速配送和完善的储藏体系，才能实现其作为商品的价值特征。

因此，与当时生产主要粮食的农业相比，渔业的价值似乎较低。

换句话说，由于生产的不确定性，储存和加工成本高，商品化难度大等特征，渔业作为税源对于王室的吸引力不大。

在统治者的立场上看来，全国税收体系中把渔业放在农业之后作为课税对象也是合理和理所当然的。

左政丞河仑等上奏了消除民弊的几个条目.....(中略).....或召集百姓造船征税，或筑渔梁而收渔利，或埋木炭收费.....(中略)严加戒断那些独占渔梁，不让百姓接触的人。还有，百姓有志愿者可得渔利，缴纳十分之一的税，报告给都观察使，并按其数额进行出纳。

每个渔箭分别指定三名有官职的人进行监察，将捕获的鱼的数量记录下来，上报郡县并记入账簿，另外秋天还让堤堰司将鱼品加起来进行合算，并分配棉布。棉布分成三份，两份给建造渔箭的人，一份上交给司贍寺。

均役法之前的海税制度的具体实行方式，可以通过《朝鲜王朝实录》而非法律制度进行推断。

首先，根据《太宗实录》，关于海税的征税信息是“百姓有志愿者可得渔利，缴纳十分之一的税，报告给都观察使，并按其数额进行出纳。”

《成宗实录》中也证实了渔箭的税率是三分之一的记事。

即，海税与土地一样，对相对捕捞量可以保持恒定的渔场的收获物进行定额征税的方式来进行。

但是，1/3,1/10的税率在全国并不统一，这也是即使全国海税都实行了均役法，也没有解决的问题。

中央政府要建立定额税、固定税率等税收制度，为了预测税收，必须以掌握生产量为前提。

但是，朝鲜王朝对于捕鱼量的信息的真实性只能完全依赖于渔业人员，实际上官方不可能掌握相关信息。

如下文所述，19世纪丁若镛在《经世遗表》也指出，渔业产量可能被渔业人员所操纵。





“我在海边过着流放生活的时候，想和书生一起坐小船去渔簋买大鱼，由于鱼贩对此讳莫如深，和船夫一起骗我，因此即使我用眼睛盯住衽桶，抓到的鱼也全部都是些小鱼。我遗憾地回来，对那里的人说了这件事，结果他们笑着说，‘渔夫有把鱼藏起来的妖术，即使你自己坐在船上，也不会明白。’”  
《经世遗表》，均役厅事目追议，渔税

而且，如前所述，渔业产量的不确定性明显高于土地产出。

因此，建立全国统一的渔业税收制度是非常困难的，与其建立全国统一的制度，不如实施根据以往积累的捕捞信息来确定的习俗和先例，这个选择看起来更为合理。

可以说，这是各地区官府和渔业人员根据各地区渔利多寡、各季节渔获丰富相互妥协的结果，而不是单方向自上而下的方法。

本节课对于涉及朝鲜时代渔业相关税收制度《朝鲜经国典》、《经国大典》、《朝鲜王朝实录》的记录进行了回顾。

下一节让我们一起来看看《续大典》中的朝鲜时代渔业相关税收制度。





### 1-3 朝鲜王朝渔业相关税制:《续大典》

上一学时我们了解了《经国大典》所记载的朝鲜时代渔业相关税收制度。  
本节课我们来看看《续大典》中的朝鲜时代的渔业相关税制。

朝鲜王朝正式对海税进行规定是在1746年的《续大典》。  
《续大典》中的户典，鱼盐条中有对渔船和渔箭的规定。  
然而，随着1750年制定了更细致的均役法，所以《续大典》中对于海税的规定相对被忽视。

如表所示，税额确定标准是根据作为生产资料的船分为大、中、小三个规格。  
关于渔船税，全国有统一标准，但对全罗道和江原道是分开规定的。

以渔箭为例，只提到了全罗道，不知道这个是否成为了全国性的标准。  
《续大典》是在讨论均役法的情况下颁布的，可以说海税部门这时候处于过渡时期。

由于现有的几项研究都认为均役法非常重要，因此对《续大典》的全面研究相对较少。  
但是《续大典》提供了过渡时期的均役法设立的各种线索，因此可以说包含了反映当时渔业情况的重要内容。

全罗道渔箭税分为大、中、小三种，年征税量大箭300条鱼，中箭150条鱼，小箭75条鱼。  
另外，每25条鱼可以换算成1匹棉布缴纳，因此大箭相当于12匹布，中箭相当于6匹布，小箭相当于3匹布。

渔船税虽然是全国性的规定，但是对全罗道和江原道却是例外。  
和渔箭一样，渔船税也是根据船的大小分成大、中、小三种，大船征税棉布3匹，中船2匹，小船1匹，更小的船0.5匹。

特别是江原道以鳕鱼进行交付时，完船缴纳20条，只有完船一半规模的半破船缴纳10条，如果换算成布匹，则完船缴纳2匹，半破船缴纳1匹。

我们来确定一下海税的规模是多少。







根据《万机要览》的作钱式，布一匹为钱二两，全罗道的渔箭中，大箭的海税是真鱼300尾=12匹棉布=24两钱，同样的方式可计算中箭是12两，小箭是3两。由此可见，全罗道渔箭的大部分规定与《续大典》中对大船4艘征收的海税规定是同一级别的。

可见，当时大规模的渔箭比渔船的税赋要高，因为它的不确定性相对较低，即从固定的税率反映出渔箭可以保证恒定的生产。

换句话说，从税收规模可以看出朝鲜后期渔箭渔业的生产力很高。

《续大典》中除了鱼盐税的赋税体系外，还收录了重要的信息。

其中，赋税对象、征税方式、重税禁止等有关海洋的规定也包括在内。下面是《续大典》中关于鱼盐条的记录。

“本曹魚箭·漁船·鹽盆之額內破亡者，地方官，毋論監·兵·統·水營所屬，竝許罷定，而或有闕額徵族之弊，則該官員，令本道決杖。○折受處·各鎮所居士率，竝蠲漁稅。○鮑作干船，全羅·慶尚道防禦緊重，勿收稅。橫侵疊徵者，論罪。斜水箭網處，定界立標，納稅于該屬一處，他處，毋得疊徵。違者，差人·監色杖一百定配，官員啓聞罷黜。”

《续大典》鱼盐条

正如纪录中所证实的那样，《续大典》比以前的《经国大典》更完善的部分是对“亡失”和重税作出禁止规定。

户曹管理下，渔箭、渔船、盐盆在当地因为台风等自然灾害而造成渔场损失甚至消失的情况下，禁止对这些允许不足额缴纳的“亡失”的渔场再进行征税。

例外的是，对于鲍作干船，因为承认其是用于防御的重要财源，所以作出了不收税的规定。

作为参考，鲍作干船是对身良役贱阶层从事鲍作业的同时，也负责采集国家进贡的贡品这批人所起的称呼。

主要是以济州岛为根据地，负责上缴贡品的人为大多数。

但是，《续大典》中对于鲍作干船在庆尚道和全罗道有被称为“防御紧用”的作为防御用途的特征。

也就是说，作为官吏的臣役，在筹措进贡物资的同时，被赋予了水军的作用，因此享受到免除海税的优待。





而这些免税规定，在下面要介绍的均役法中也原封不动地继承下来。

总之，《续大典》是在既存《经国大典》仅形式上提到的海税制度做了正式法制化规定。

这反映出随着大海被官房和衙门所垄断，税收的主体重叠，当时围绕大海的利害关系十分尖锐，其内容原封不动地融入了对于海税的法制化整理和精巧化的过渡阶段。

这一学时我们回顾了朝鲜时代渔业相关税收制度中《续大典》的相关规定。

下一节，我们就来一起了解一下朝鲜时代渔业相关税收制度中的均役法。



## 1-4 朝鲜时代渔业相关税收制度:均役法

上一节课我们了解了朝鲜时代渔业相关税收制度中的《续大典》。

本节课我们来看一下将海税编入主要中央财政源而不是杂税部分的划时代渔业税收政策：均役法。

均役法是由18世纪英祖实行的良役制改革而成的税收制度。

其主要内容是将之前每年向一丁收取两匹军布减半调整为一匹，余下财政资金不足的部分由结作米、选武军官布、海税等新税源作为补充。

作为参考，结作米是指针对虽然是耕作地，但因为遗漏未在土地登记簿上登记的隐余结而采取的征税措施，选武军官布是指通过设置选武军官将避役者纳入军役体系，从而向他们征收军布的方式。

最后，海税是指对之前被分类为杂税的渔盐船税进行调查并将其归属于均役厅管辖的措施。

均役法的早期研究主要集中在均役法形成的过程以及均役法作为一种改革的税收制度是否成功，即新设的税种是否能支持长久的税收增长，另外对多样化的供代财源是否真的让百姓们实实在在地感受到良役制所带来的减负效果的肯定或否定评价上。

最近有人提出应当依据实证资料对每个税种进行深入研究，继而重新评估均役法。

这可谓是一种开端，即强调必须先以实际内容为切入口展开研究才能对均役法做出适当的历史评价。

另一方面，关于均役法的各种研究虽已有先例，但在海税的制度史层面却有待详述。

如果不是从良役制的改革制度的角度，而是从建立海税的角度来看，均役法作为朝鲜王朝全国范围的渔业相关税收法规具有重要意义。

因此，有必要更仔细地梳理由均役法的实施而产生的渔业所有权关系的变化。

在本课中，我们将以均役法的主要供代财源来源之一——渔盐船税为中心，考察均役法对渔业所有制产生的影响。

为确保税收，最重要的是首先要对官家和衙门私占海洋资源和因海洋而特别获利的行为进行整治革新，这是因为人们对均役法的解读是，它不仅局限于对良役制的改革，它还将私人占有海洋的部分也包括在被改革的范围之内。







本课的重点是从建立海税制度的角度重新评价该措施。

均役法中有关海税的主要内容根据《均役厅事目》汇总如下表。

均役法规定的海税首先是在湖西、京畿、湖南、岭南、黄海、平安等全国范围内进行统辖。

征收原则分为适用于所有地区的一般规定和特定地区的特殊规定。

一般规定大致分为向在海上设置固定渔具的定置渔具、渔场和渔船征税。

对受税对象的这种区分是在均役法的海税制度之前就存在的形态，从之前讲过的『续大典』中可以确认这一点。

但『续大典』不是全国性的一般规定，从这一点来看，与均役法的海税制度不同。

均役法海税征税方式的共通之处是对渔箭、渔条、渔场、渔基、渔船等按地区划分等级，并据此设定税额。

为了便于理解，将利用当时《经世遗表》14，均役事目追议，渔税部分收录的渔业相关用语进行说明。

渔箭渔业是指沿着渔道用竹子筑起围栏，在死角处设置鱼笼等陷阱捕鱼。

渔条是指在鱼群从远处经过的洄游路线上停船撒网捕鱼，此时，就像有一条分岔路一样，所以叫渔条。

渔场是指在广阔的大海中，在鱼类聚集的地方，大大小小的渔船追着水撒网的地方。

最后，渔基是指在地形方便、适合捕鱼的地方，以大船为中心，由小船护航捕捞的方式。因其地理位置优越，所以叫渔基。

如表所示，各地区对渔箭、渔条、渔场、渔基、渔船的征收等级和征收税额各不相同。

渔箭在湖西3~40两，湖南1~3两，京畿7~24两，黄海2~20两，平安2~15两，湖南最少，湖西最多。

同时可以确认，最高税额是黄海道对青鱼箭征收40~250两。

其次，除共同规定外，均役法的海税制度还设有各地区的特殊规定。

从表中可以看出，根据不同地方的海域特征，对定置渔业发达的注朴、网机、防帘、温埃等地征收海税。







为了便于理解，将利用当时《经世遗表》14，均役事目追议，渔税部分收录的渔业相关用语进行说明。

注朴是一种渔具捕鱼法，它巧妙利用西海岸地形，通过把草绳制成的网围在潮汐间差异较大的特定地区进行捕捞。

注朴因其与鱼箭类似，但效率比鱼箭高而为人们所熟知。

网机是定置渔网的一种形式，但其种类不明。

防帘是一种类似于鱼箭的渔网，是指主要在庆尚道沿岸发展起来的渔具捕鱼法。

温堧是一种类似于注朴的渔具，在朝鲜后期统称为柱木网。

最后，经确认，均役法海税的所有税收统一以铜钱（硬币）形式征收。

以大同法为契机的现金纳税倾向也反映在均役法中。

这与此前在同一英祖时期颁布的『续大典』的鱼盐条中征收大米、布料或实物形成了鲜明的对比。

各地的海税征收方法各不相同且错综复杂，这可以归结于英祖派遣官员调查的各地区的税收制度都被原封不动地纳入法律当中。

可以看出，英祖在实施均役法时，融合了各地区已经存在和正在实施的渔税制度，同时还采取了整合和简化一些征收方法等措施。

但也有批评性意见指出在此过程中由于没有明确的地区各自的税收适用标准，在内容上缺乏公平性。

具代表性的是茶山丁若镛在『经世遗表』中批评了不公平、没有原则的问题，他说：“在船税中暗暗取消了平安道，在盐税中悄悄地省略了庆尚道，在渔筭税中又暗中取消了湖南税率。”

即均役法的海税制度虽然经历了税源调查的过程，但作为税收制度，它的形态还不够完整，缺乏统一完善的标准。

如表所示，不难发现均役法海税制度的特点是各地区的受税对象、受税方式、受税额多种多样且错综复杂。

那么，这种缺乏统一性的税收原则意味着什么呢？





第一，均役法的海税制度原封不动地吸收了朝鲜时代分散在各地区的渔业相关税收制度。

正如诸多史料所证实的那样，在均役法的海税制度正式作为税收制度形成之前，全国范围的调查已经率先启动。

但由于没有适用全国的统一规定，因此只能确认现有的渔税制度是在各地区按不同的方式发展而成的。

第二，从结果来看，划时代的改革政策似乎也未能实现对渔业的统一征税。

这是因为均役法海税制度的最终目的在于革除私自占有和确保供代财源。

也就是说，英祖关注的重心比起公平地征收海税，更注重查明被官家和衙门私占和漏缴的税源，从而实现确保国家财政资源的目的，这一点可以在以下资料中得到证实。

“魚鹽船稅者，我國三面濱海，而魚鹽之利盡歸於私門，故肅廟朝欲別設一司，專管收拾而未果，至是因大臣建白，分遣朴文秀、金尙迪、李厚等於嶺南、關東、海西、畿內、湖西、湖南諸道，審視定稅。金尙迪在海西病卒，黃晷承命察海西數邑，及畿內、關西、關北，則使道臣行之。仍命盡罷諸宮家折受漁箭及所屬船隻，使之一體徵稅，至有‘苟可以爲民除弊，予何愛身體髮膚’之教，實是千古所未有之盛舉也。” 1752年1月13日『英祖實錄』

最终，朝鲜王朝实行了比总制，即按地区征收固定配额的海税，将征税按照现有的各地区纳税惯例去实施，这是出于保障中央政府所需的财源稳定的目的。

第三，各地区不相统一的海税制度反映了当时的渔业状况。

接下来通过各地区均役法海税的征收内容，比较一下各地区发达的渔业情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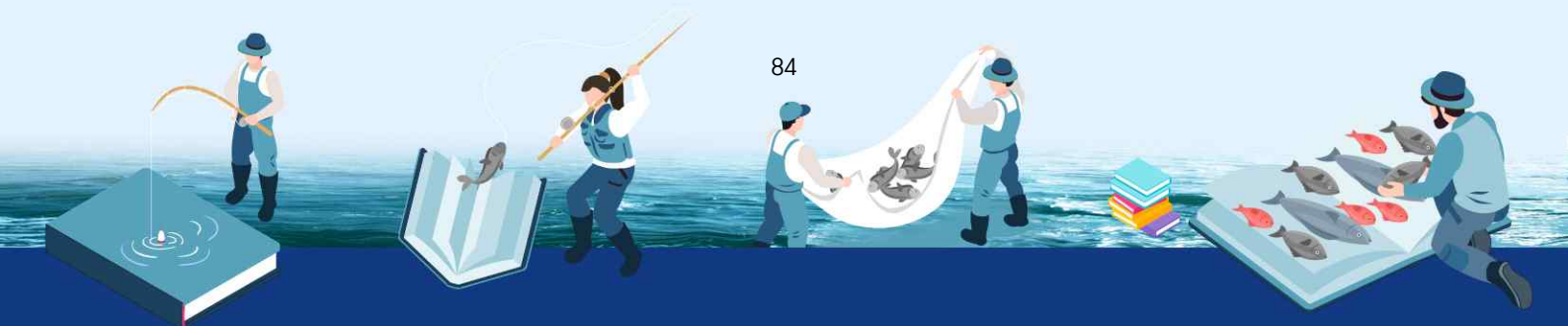
首先，湖西地区的注朴在当时很发达。

注朴是在潮汐差异较大的西海岸地区发展起来的一种依赖于地形的捕鱼方法。

湖南没有对渔场进行分级，而是征收20~40两的定额税。

据推测，这是灵光郡坡市坪等西海岸发达的早期渔场的捕鱼费。

从其他资料来看，在《备边司誊录》中，户曹判书李时昉以全南监司提交的上书为依据提到，不仅是官家或衙门，在坡市坪收税的船只都要收取一“同”的税，并交给户曹。





这里的单位“同”是指黄花鱼1000条，青鱼2000条。

而且，在《承政院日记》中，渔民们还请求减免上司，官家和衙门所管辖的卸水税，渔场税以及户曹管辖的坡市坪地税。

也就是说，当时在洄游性鱼类聚集的特定海域，即渔场发达的地区，渔民们为了能够利用和获取资源，其代价是被迫接受征收捕鱼费性质的渔场税。

总而言之，定额税在坡市坪等历来有鱼类洄游的区域，即，在那些能保证捕获的海域盛行。

另一方面，经确认，在岭南地区定置渔具防帘的使用非常普遍。

同时，发达的渔业主要在较远的海域，以移动性较强的鱼类为捕捞对象。

由此衍生区分各种赋税对象，比如青鱼渔场、章鱼渔场、江渔场、洋中举挥罹、洋中去处条等，对其采用定率税、定额税两种方式进行征税。

特别是，章鱼渔场和江渔场被专门规定要按照捕捞量的多少相应地缴纳一定比例的定率税。

作为参考，将通过以下资料来确认在『经世遗表』均役厅事目追议的渔税部门中关于五分之一税规定的决定过程。

“舊例漁隧漁箕。立船曰隧。設柵曰箕。捉杏魚青魚者。機張縣五分稅一。東萊府八分稅一。統制營三分稅一。右沿漁稅本屬於統營。輕重不均。今從其中者。五分稅一。昌原江魚場。舊例隨捉隨稅。本無定額。今亦以五分一立率。”『经世遗表』均役事目追议，渔税

由此可知，均役法的海税制度沿用了早前的税源调查结果，但简化了征收税率的内容，采用了统一的标准。

另外，岭南地区对在海域中心处进行捕捞的“洋中去处条”和“洋中举挥罹”两种捕鱼方式征收定额税。

简单解释一下这里出现的术语，根据『经世遗表』可知，“去处条”与渔场不同，它是指在鳕鱼或青鱼的渔获季，不进入渔船须缴纳捕鱼费的渔场、鱼隧亦或是鱼条，而是在海域中心处滞留捕鱼的一种方式。







“洋中”的字面意思是海的中央，是由渔场扩展出来的概念。

此外，捕鱼用的大网——拖网捕捞的‘洋中举挥罟（洋中举挥网）’虽然也是利用无主物进行捕捞，但仅限于捕捞效率高的渔具。

对“洋中去处条”和“洋中举挥罟”征税是指以岭南地区为渔业基地，向能够在较远海域捕鱼的渔船以及能够围捕到鱼群的大规模渔网等征收税额，这可以解释为不仅丰富了生产方式，还促进了大量渔获的流通组织的发展。

船税如表所示,没有单独区分渔船，而是根据各地区船舶的大小分级征收。

同样地，这一项也不是统一的规定。

综上所述，在朝鲜王朝后期，均役法对于建立全国性的海税制度具有重要意义。

虽然均役法下的海税制度是为了补足税源而制定的，在全国范围内存在征税标准不统一的局限性。

但是各地区不同的税源反映出随着朝鲜时代渔具使用以及捕鱼方法的不断发展，税收体系也在发生着更加复杂多样的升级演变。

到现在为止，我们在第一节课中探讨了朝鲜后期渔业税收制度。

在课程中，我们以史料为基础，通过《经国大典》、《续大典》、均役法对于朝鲜时代渔业相关税收制度的变化情况对其特点进行了确认。

下面的第二节课，我们将从史料中看朝鲜后期渔业的实际情况。

第一讲到此结束，谢谢大家。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퀴즈

### 01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5분

- ① 수산자원은 인간의 사용률에 따라 존재량이 변하는 자율갱신자원이다.
- ② 공유지의 비극은 비자율갱신자원을 갱신률 이상으로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자원이 고갈되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 ③ 수산자원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자원이다.
- ④ 비고갈성자원은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끊임없이 보충되고 갱신되는 자원으로 햇빛, 어류, 산림 등이 속한다.

정답 ②

**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자율갱신자원을 갱신률 이상으로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자원이 고갈되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비자율갱신자원은 인간의 사용과는 무관하게 항상 보충되는 특징을 지니며, 대표적으로 햇빛, 공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02 “조선왕조는 산림(山林), 어전(漁箭) 등 산림천택(山林川澤)에 대해 ( )를 원칙으로 하였다. 산림천택은 고려 시대 사점(私占)의 대상이었으나, 조선조에 들어서는 이들 영역에서 백성들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허용하고 있었다.” ( ) 안에 들어갈 단어는?

10분

정답 여민공지(與民共之)

**해설** 조선 초 왕토의 범주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공유자원인 산림천택이 포함되었으며, 그 이익을 ‘백성과 함께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여민공지(與民共之)라고 합니다.





### 03 조선시대 수산업 관련 규정 또는 해세제도를 언급한 사료가 아닌 것은?

5분

- ① 경국대전
- ② 속대전
- ③ 호구총수
- ④ 균역청사목

**정답** ③

**해설** 경국대전, 속대전, 균역청사목은 조선시대 산림정책에 대한 규정, 해세부와 방법 등 수산업 관련한 조세제도 등을 담고 있으며, 호구총수는 조선시대 한성과 각도의 호수와 인구수를 기록한 호구통계 기록입니다.

### 04 균역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5분

- ① 균역법은 해세(海稅)를 잡세의 영역이 아닌 주요 중앙 재정원으로써 편입시킨 획기적 어업 수세 정책이다.
- ② 균역법 해세는 일반규정으로 정치어구(定置漁具), 어장(漁場), 어선(漁船)에 대한 과세로 구분된다.
- ③ 균역법에 해세는 지역적으로는 호서, 경기, 호남, 영남, 황해, 평안 등 전국을 포괄하고 있다.
- ④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해세를 적용한 것이 균역법이 기존의 해세제도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정답** ④

**해설** 균역법하 해세는 공통규정과 지역별 특수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지역별로 수세 대상, 수세 방식, 수세액이 다양하고 복잡한, 즉 통일성이 결여된 수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05** 『경국대전』에 형식적으로 언급된 해세 규정을 본격적으로 법제화한 것은 균역법이다.

5분

- ① o
- ② x

**정답** ②

**해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형식적으로 언급되었던 해세 규정을 본격적으로 법제화한 것은 속대전입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 됩니다.

## 주제

조선시대 경국대전, 속대전, 균역법에 수록된 해세 내용 및 특징, 그리고 변화하는 양상을 서술해 주세요. (60분)

## 참고

조선 초기에 어업과 관련된 부세는 국가 재정의 주된 원천이기보다는 보조적인 재원으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선 초기 자료에는 공유자원에 대한 여민공지 원칙, 즉 공유재(共有財)로서 인민 모두가 향유 하도록 한 방침에 초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선초 어업에 대한 조세체계는 형식적인 규정이라는 특징이 있고, 이후 속대전, 균역법에서는 수산업의 생산수단에 따라 해세 부과방식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시대 어업관련 수세제도가 후기로 갈수록 보다 복잡하게 발전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양상에 대해 학생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 엘리너 오스트롬(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알에이치 코리아

“제2장, 공유의 딜레마를 넘어 : 자발적 집합 행동 및 자치에 관한 제도론적 연구 접근”과 “제3장 지속 가능한 자발적·자치적 공유 자원 체계에 대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이욱(2002), 「朝鮮後期 魚鹽政策 研究」, 高麗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제4장 18세기 중·후반 균역법 시행과 어염 정책의 확립”을 중점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